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79달러의 후진국에서 GDP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며,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는 정부·민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평균 20%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 국가 R&D(조 원) : (1980년) 0.2 → (1990년) 3.2 → (2000년) 13.8 → (2010년) 43.9 → (2020) 93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기술개발·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문제의 해결 및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Fast-follow 전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재설계 및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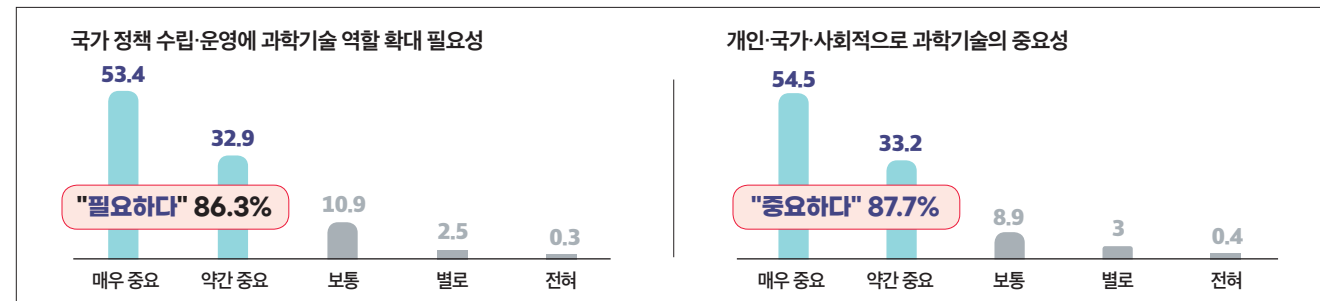
이에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혁신 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윤석

< 과학기술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

※ 일반국민 1,009명 대상 설문조사 (2022.3월, KISTEP)



열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여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며 3대 전략-17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중심 R&D 혁신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소중립 범부처 R&D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선정,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범부처·전주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과학기술로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고령화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미세플라스틱 ▲감염병 등 5개 영역을 핵심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국민의 '체감'이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합 (2023-2027)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69.7	699.2	728.6	762.1	3,498.3
정부 R&D							
총 규모(조원)	29.8	31.1	32.0	33.6	35.7	38.1	170.5
전년대비 증가율(%)	(8.7)	(4.4)	(2.9)	(5.0)	(6.3)	(6.7)	-
총예산 대비 비중(%)	(4.9)	(4.9)	(4.8)	(4.8)	(4.9)	(5.0)	-

※ 정부 총지출: '22~23년은 예산, '24~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기준, '27년은 추정치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을 80%에서 85%까지 향상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편, R&D예비타당성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시 지원체계를 갖추어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2022년 9월 마련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예타 조사의 절대시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반려제도를 강화하여 투자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31.1조원)을 돌파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정부와 민간의 합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이제 민간의 연구개발 역



2023년도 정부R&D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R&D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민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



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R&D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고, 민간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민간R&D협의체'를 확대(5개 분야 120개 기업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R&D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총 28개 기관 8,256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하여 54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



2022년 말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6G 등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양자와 수소 분야 전략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추진, 5G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증대와 경제활성화, 10건의 특례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추진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산업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전문기관별 개별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 기능, 서식, 항목 다양 및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IS 시스템에 통합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불필요 ● 기능, 서식, 항목 표준화, 간소화
부처·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적용 지연(2~3년) ● 정보 공동활용 제한 ● 개별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 비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적용 단축(3~6개월) ● 전주기 정보 공동활용 ● 예산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지털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2022년 8월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일반국민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의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유연성 강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연구행정 부담 완화와 연구몰입 환경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간접비에서 박사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 허용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했으며, 혁신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사항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선정 규모·추진체계·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보완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앞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 '첨단바이오'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22년 12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5대 인프라-12대 핵심기술 확보 ②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 달성 ③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투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기술육성	기술수준	집중투자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디지털바이오 20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첨단바이오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빅데이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바이오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양자과학기술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1년 466억원에서 2023년 96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세번째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출시한 국가가 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보안검증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통신장비 기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석학과의 대화(2023.1.19)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 등 양자 선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도 13개국 간 양자과학기술 다자 협의체의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선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세계적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양자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0년대 글로벌 양자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간(時刻)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3월

부터 KPS-GPS 기술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편익 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UAM, 하이퍼튜브 등 모빌리티 분야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R&D사업계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및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환경 개선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자의 머릿속, 보고서에만 있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되고, 실제 사업으로까지 커나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다르게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 때문에 특구 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었고, 9월 중 제도가 시행되어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의 9,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적인 기술의 가치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원자력, 사이버안보, 신형·핵심 기술 등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성과로 2022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4월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자기술 등 유럽이 선



뉴욕대 디지털 비전포럼(2022.9.21)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022.11.28)

도하는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협력과 병행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10월 국내 방문연구 시 사증 발급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데 유연한 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각 실천과제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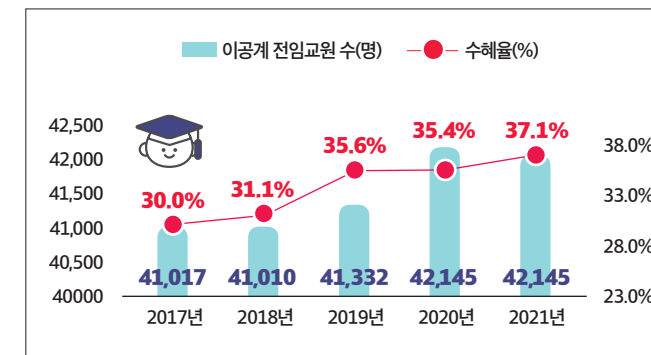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58조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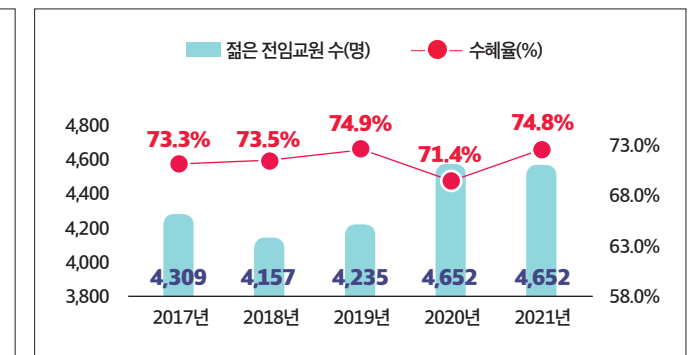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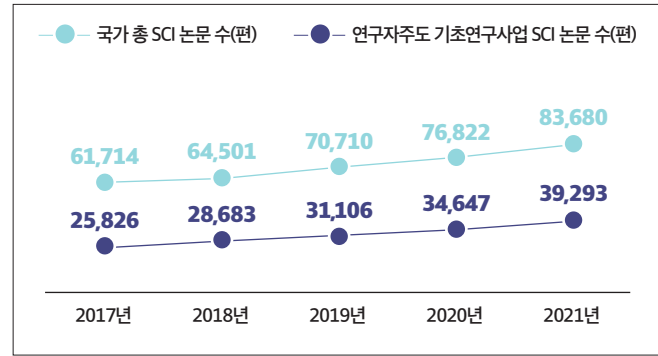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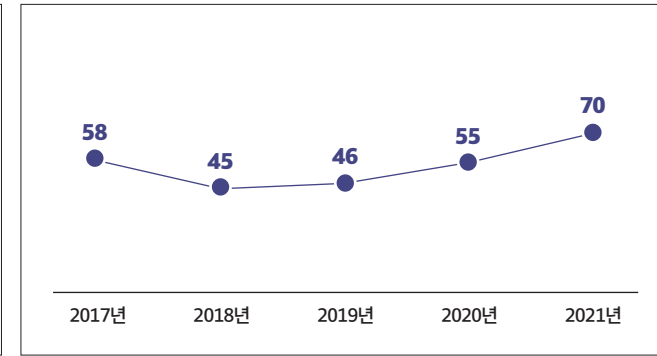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명(분야 중복제외 시 63명)으로, 이 중 55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입니다.

올해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원 연구비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하기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33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 준공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점유율(B/A)	25.2%	25.5%	27.1%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기초과학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집중할 핵심전략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단별 특성화 육성전략 마련 및 지원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초과학 성과 및 지식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차점검·중간점검을 폐지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연구 지원 규모를 상향하여 적정 최소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신규과제 일부를 지역 연구자에게 할당하는 지역 연구자 우대정책 적용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성장분야에 대한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인력과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R&D 수행과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증서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참석자 후기 中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이OO

-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동문의 밤 >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먼저 이공계에 진학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8,661명의 대학생에게 약 5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대상 선후배 멘토링의 2022년 시범 운영 및 2023년 신규 도입으로 장학생의 성장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준 총 237명 참여, 연수 종료 인원 95명 중 90명 취업 (취업률 94.7%)
** 2023년 10명 선발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 파견되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사업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양자·수소·반도체 등 3개 연구단 선정을 중심으로 하버드·스탠포드·옥스퍼드 등에 파견했고, 2023년에는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7% 이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8,575명 → 2022년 27,610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2년 8,457명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복귀 연구과제와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으며,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 전후 과학기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3.7%→16.7%)로,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77개의 애로를 해소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400여회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확충,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중소기업 간 수요매칭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창의·도전적 인재를 확보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직군 훈련지원 통한 경력복귀 사례

- 자녀의 육아로 인해 약 5년간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예비복귀자 직군 훈련지원인 바이오·의약직군 훈련을 통해 R&D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엑소좀 기반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연구소로 경력복귀에 성공함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중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의 민간주도 생태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석학과의 대화’(2022년 9월)를 추진하고, 한국-캐나다 AI 기업·기관과 협력 및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위조품 탐색 솔루션을 개발·적용하여, 예전에는 만 하루가 걸리던 불법 복제품 판독시간을 5분내로 단축하게 되어 대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농축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등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시범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의료·건강 분야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을 마련하고, 챗지피티(Chat 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4월)을 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등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적용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시설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고급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2022년 9월 새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4곳을 지정(2023년 1월)하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자 간 중개를 알선할 데이터 거래사도 50명 배출

(2023년 1월)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비용, 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 35.5% 향상, 정보 기술 자원 구축비용 17.6%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마중물에 힘입어, 국내 SaaS 기업 수는 2020년 780개에서 2021년 1,102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Saa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교에서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 SaaS 개발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된 메타버스(Metaverse)는 플랫폼 신시장과 연결되어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혁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파급을 이끌기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총 투자 규모는 1조 4,308억원으로 전년 1조 3,736억원 대비 4.1% 확대되었으며, ICT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무지향·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연구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자의 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관공동으로 구성·운영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을 2022년 12월 발표했습니다. 이 때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여,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뉴욕구상(2022.9.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022.9.28)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K-Network 2030 전략’ 마련·시행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계·학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총력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997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상용화 등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기술(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먼저 6G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반을 구축했는데, 6G 기술개발의 경우 2021년 172억원에서 2022년 308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6G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도 2022년 KAIST·아주대·서울대·숭실대 등 4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력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6G 공동연구를 2021년 2개 과제에서 2022년 3개 과제로 확대했고, ITU에서 6G 미래기술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를 참여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2026년 Pre-6G 기술 시연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Network 2030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의 네트워크인 5G 망에 대한 고도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속도 개선을 위해 2022년 3.4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거주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종합한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2022년 9월 21일)에서 디지털이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혁신의 방향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는 디지털 정책 비전(뉴욕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와 철학,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등을 종합하여 새정부의 국가 디지털 종합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2022년 9월 28일)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체를 통해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B20 Summit(2022년 11월) 기조연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22년 12월), 한-아세안 디지털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2023년 3월)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세계의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구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2022년 11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2022년 12월) 한 바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23년 1월)에서의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 해소를 위한 디지털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했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디지털 심화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위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출범(2023년 3월 2일)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2.7.13)

하는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습니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빈틈없는 5G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통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일간의 밤샘작업으로 복구 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근거법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했고, 디지털안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원인분석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기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기술 활용을 본격화하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2022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발견하여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내 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도봉경찰서와 함께 실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산불·홍

수 등 자연 재해를 디지털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민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규제혁신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인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 융합보안대학원 등 대학·대학원의 정규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양성교육 등 특화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사업으로 길러진 교육생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대회인 ‘DEFCON CTF 2022’에서 우승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제 적용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2-3개월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설명회를 하고 제도 개선 후에도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는데,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C-TAS(Cyber-Threat Analysis System)’라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C-TAS의 시스템 구조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올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고, 그 결과 2021년까지 328개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를 2022년 말 기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디지털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9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별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문자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안심마크 표시제’를 2022년 10월부터 시범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과 지역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합하고 상호 운용하는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무선 활용 기기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전파 시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수요를 수렴하기 위해 2022년 7월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연령별·구간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24GB-31GB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 했습니다. 이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는 SKT가, 4월에는 LGU+가 30~110GB 사이 중간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37GB, 54GB, 74GB, 99GB 등)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eSIM도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eSIM은 약 2,750원으로 USIM 비용인 7,700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개통이 빠르고 편해져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eSIM 도입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듀얼심 전용 요금제도 출시되어 이용자들은 8,800원의 비용부담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4만 3,000개소가 구축되었었는데, 2022년 전국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에 1만 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시내버스에 구축된 4,2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활용능력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공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79만명을 교육하고,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스피커 등을 배치한 디지털 체험존(231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을 선정하고 4,846대를 보급·추진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 학습기,비접촉 생체센서 자가돌봄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 개발(4건)을 추진하고, 중소 보조기기 개발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영역을 확대하면서 우주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개발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4회 추가 발사하여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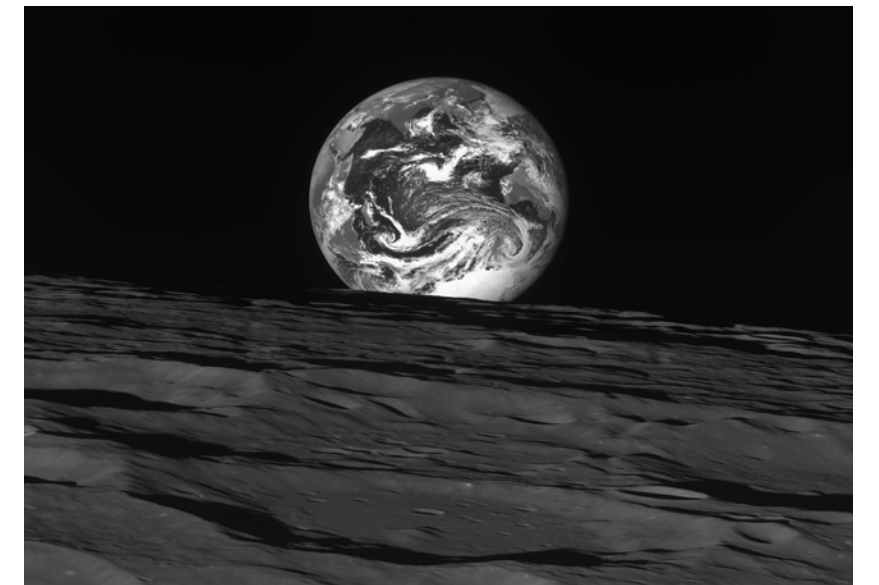
2023년 3월 20일 02시 52분(한국시간)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위성을 약 130여기 제작하여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발사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진입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 이후, 약 145일간의 항행을 거쳐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 했습니다. 1992년, 우주개발의 불모지에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꼭 30년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더해 우주탐사 자체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누리에 이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누리가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지구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하여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23년 3월부터 KPS-GPS 기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에 정회원국(한국 포함 13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KPS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은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를 거쳐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의 배치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PS가 구축되면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져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 확장됨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인력 수급 일치를 위해 2022년 8월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체계교육-기술 사업화, 채용 연계를 도모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5곳 개소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주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전문연수 과정에 4개월 간의 기업체 인턴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기자단 설명,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해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전문가 유입을 위해 보수상향, 파견·겸직 허용, 취업제한 완화, 주식백지신탁 예외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고 인력채용, 업무이관, 청사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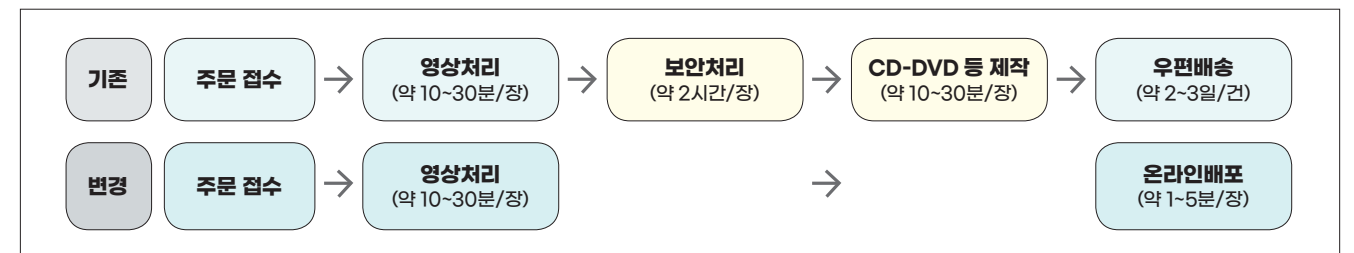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각 특화지구별 국가산단 조성, 핵심 연구개발·산업 인프라 및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이상의 우주펀드를 최초로 조성하여,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으로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

15년만에 국가위성 영상의 보안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보안처리의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화하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하는 위성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했습니다.

<1.5m급 위성영상의 처리 및 배포 속도 개선 사례 >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00년) 49.3%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수도권·대전 비중(20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연구원 72%, R&D조직 68%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간 연계 등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로 과학기술전담기관을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능을 갖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5개 지정(2023년 1월)하고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 현안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모형을 창출하고 타 지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신규 지정(2023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 5대 우주개발 임무 >

① 우주탐사 확대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착륙
② 우주수송 완성	(2030년) 무인수송 → (2045년) 유인수송
③ 우주산업 창출	(2030년) 자생적 생태계 → (2045년) 10대 주력산업
④ 우주안보 확립	(2030년) 독자체계 확립 → (2040년) 대등한 국제공조
⑤ 우주과학 확장	(2030년) 태양계 → (2040년) 심우주

니다. 이에 따라 영상활용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준 실시간 위성영상 서비스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내 위성영상 활용산업의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위성영상판매기업 SIIS의 김문규 대표는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배포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 후 영상처리·배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 21일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인 5대 임무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16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224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400건, 특히 118건(출원 95건, 등록 2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8개 기업과 총 7억 7,776만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초광역협력형, 지역혁신도약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를 목표로 총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등을 통해 최대 10년 간 (3+3+4)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Open-Lab)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0개 대학이 95개의 Open-Lab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163개 대상으로 총 205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21년 4,800만원으로 2021년 대학 평균 건당 기술료가 1,9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5년간(2023~2027년) 연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기관 지역대학-출연연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의 강점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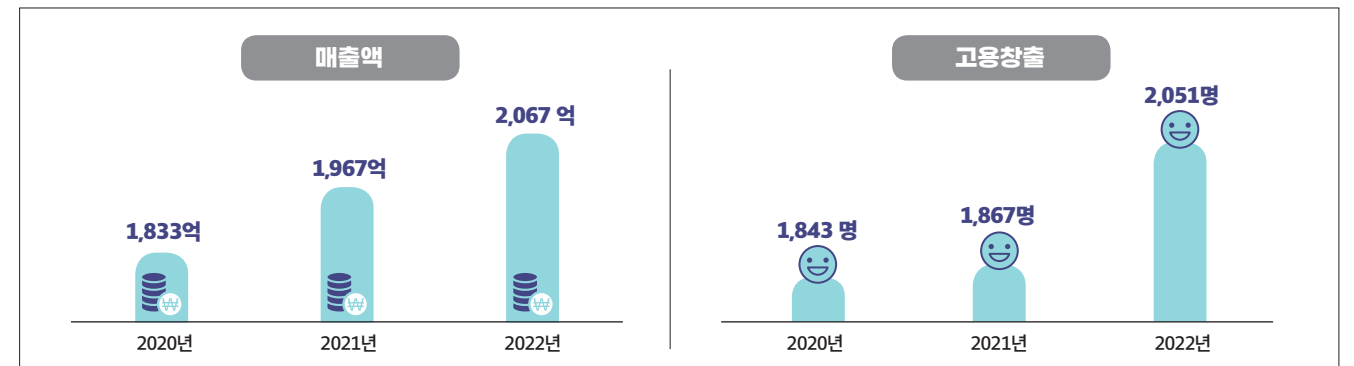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연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28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067억원(전년대비 5.1% 증가), 2,051명(전년대비 9.9% 증가)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0~2022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연구소기업 성과 >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과학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려층 약 5만 1,000명에게 과학 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9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고실과 10개 권역에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일상회복 이후 개최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2년 8월)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장체험형 과학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만 6,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과학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2개소(강원 원주, 울산),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 조성(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을 위한 절차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에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등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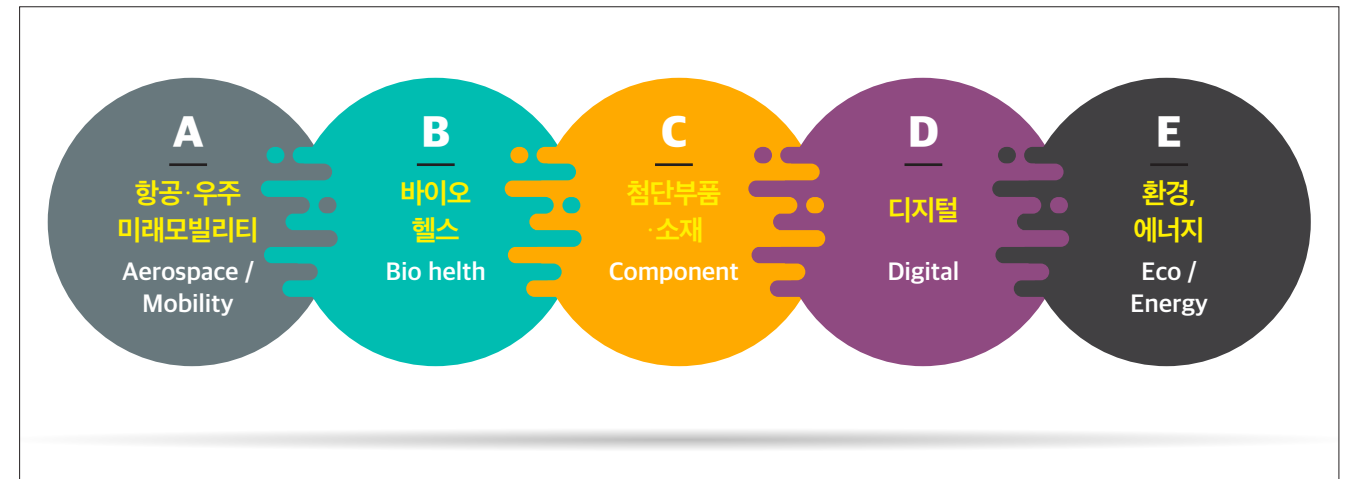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2023년 2월 1일)했습니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5대 첨단 분야(A·B·C·D·E)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각계의 인재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인프라이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 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3년 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2개교(2022년 신규 2개교 → 2023년 5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3년 51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초격차를 이끄는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 1위 수출 품목(1,292억 달러, 18.9% 비중, 2022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하여는 ‘교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학의 겸·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의 겸임·겸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통해 2022년 반도체 설계, 시스템, 생산 등 전문인력 925명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우수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집중

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023년 신규 8교, 540억원)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2023년 신규 150억원)를 신설하여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우수한 반도체 실습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교육 허브 구축도 추진(2023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형 디지털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약 1만 명의 민관 협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관의 견고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2.2만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0만원, 6.8%)보다 높게(251만원, 16.9%)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VR)도 총 14종을 개발·보급했습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초17 → 34H, 중34 → 68H), 정보 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고)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영재학교·과학고 7개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2022. 86.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교육 선도학교·AI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확대 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4교 → (2025년) 28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6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672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3년에도 대상을 7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2023년 3월, 교육부고시)을 통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3년 21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예비교원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영(2022년 9월 기준, 2,736명 재학)하여 교과와 연계된 AI융합교육이 학교 수업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하여 대학 공동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사업기획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에 맞춰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비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에 교육계,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총 4회, 2022년 10월~2023년 2월, 유튜브 생중계)하여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 및 효과(2022년 10월 24일)



수시전형 운영현황 및 평가 (2022년 11월 29일)



현행 수능의 운영현황 및 쟁점 (2023년 1월 17일)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2023년 2월 27일)

아울러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시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2022년 12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입시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담당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설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정 718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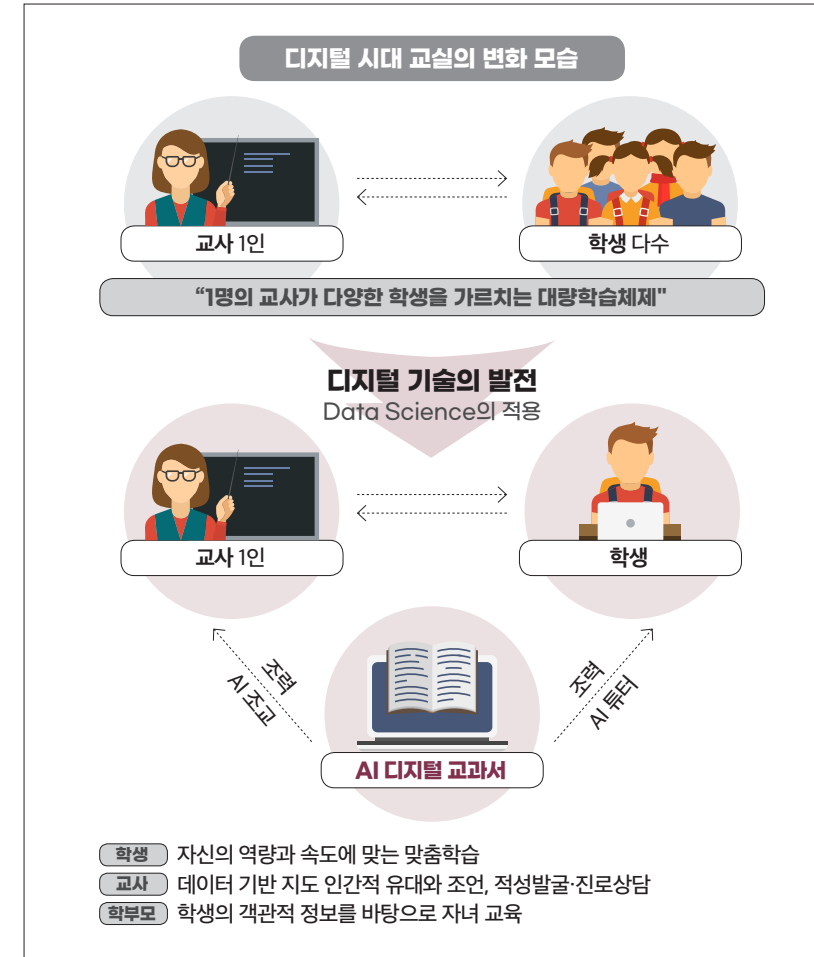
또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1,692개교)로 확대하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학생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성취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초3, 중3, 고2)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3년 초5·6, 중3, 고1·2 → 2024년 초3~고2)하여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여개 대학에 배포하여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실

팅을 확대하여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65개 과제(134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융복합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에 47,484명이 이용(전년대비 146% 증가)했으며, 학생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프로그램 개발·보급 69종 개발 및 적용,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 지정·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국제화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CAMPUS Asia 한중일 사업,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확대했고,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2023년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2학년에서 초 3~4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4,010억원, 학생 207만명), 교·사대생 등을 통한 대학생 튜터링(542억원, 19만명)등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또래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847억원, 학생 149만명)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결손 해소 중장기(2023~2025년) 이행방안’을 수립(2022년 10월)하여 종합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하여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증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의 특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 지원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쳐, 디지털 학습이력 체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학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2022년 6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대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2년 12월, 2023년 3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했고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와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학생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2022년 9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교육부 승인심사를 통과한 총 4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하여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술 창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 구축 및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친화적 제도를 확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지자체와 지역 창업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ID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2022년 기준 837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하여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우선 대학의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진단을 2024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재정진단 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확정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와 예비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2024년 재정진단 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하여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선정 사례 >

- 부산 A대학 문화콘텐츠 경영학부 :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공동 육성
- 대구 B전문대학 AI 빅데이터과 : AI 실무능력을 갖춘 개발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져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해나갈 것입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양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추

< 늘봄학교 지원 체계도 >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빨라진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초1 집중 프로그램은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했습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돌봄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2023년 7개소 신축 예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KB금융)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2월 20일)하여 시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공무원(127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우수모형을 발굴하고 내년에 7~8개 교육청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19개, 선도학교 96개(교육부 지정 30개교, 시도교육청 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복지수 개발,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지정·운영(159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444학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776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링(1,631명), 진로직업교육(40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23명, 73회)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 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UCC 공모전(2022년 6월, 209개 작품 접수), 교원용 가이드북도 개발·배포(2022년 7월)했습니다. 그리고 범사회적 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들이 변화하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선생님 존경·사랑 이모티콘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주요 사례 >



(경기도 이천시) 전문 직장인 운동선수 양성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교재 “세종말싸미” 제작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연 35만원 지원)를 3만 4,000여명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6만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도 지원(2022년 약 8만명)했습니다. 문해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2022년 32개 지자체에서 총 778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8,109명의 장애인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6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K-MOOC(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과 방송매체를 통해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수업’ (EBS), 제임스 카메론(영화), 조말론(항수) 등 세계 석학, 분야별 마스터 40명 강좌 ‘차이 나는 K-클래스’(JTBC),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범내러 온다 안무가 김보람 등 대한민국 문화 예술 강좌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 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필요과제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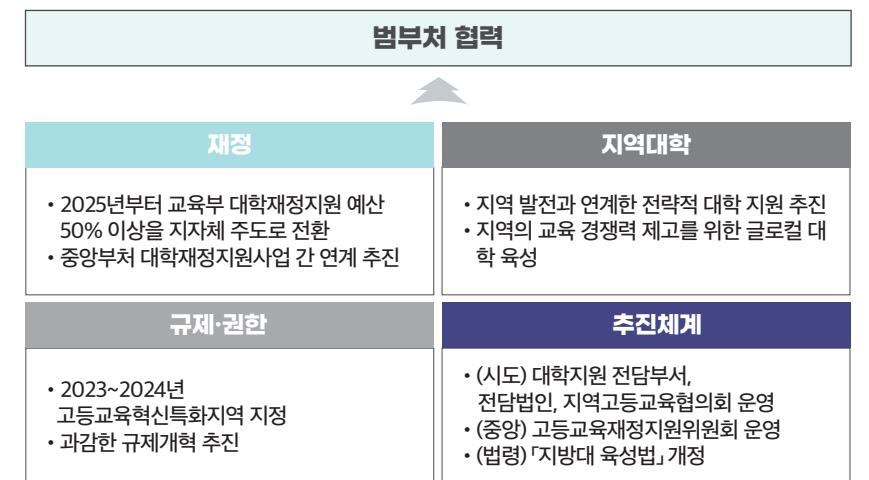
2025년 RISE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RISE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7개의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도 워크숍과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RISE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글로벌대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2차)를 진행했고, 2023년 3월에는 ‘글로벌대 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4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14일간),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글로벌대 3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고와 선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 및 간담회(4회), 집중컨설팅(11월), 플랫폼별 맞춤형 컨설팅(10월 ~ 11월)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부산, 전북, 제주)을 선정하여 비수도권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체계 >



전역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완료(3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성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RISE 시범지역에 대한 RISE계획(5개년)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내외의 글로벌 대학 지정, RISE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등으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지역 기업은 신산업·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신기술 관련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젝트(WE-Meet)를 2022년 시범운영했습니다. ’22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5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36개 신산업 기업과 학생 334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WE-Meet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2023.2.24) 학생 소감 발표

-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신기술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하여 도움이 되었음. 일자리 미스매칭 등 취업부담 경감에 기여함.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자 소감

- (참여 학생) “현장에 필요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계속 다니고 싶음”
- (참여 기업) “학교 졸업 후 회사에 와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하나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미리 교육시킬 수 있어 감사함”

< 2022년 매치업 학습자 대상 우수사례 현황 >

“베트남 파견근무 중 ‘매치업 빅데이터 수강’... 이론이 아닌 실제 산업현장 지식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빅데이터 핵심직무 능력을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매치업 과정 수강... (중략), 인적자원분석 대쉬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법인 인원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HR 업무개선

“22년 군 생활 마치고 ‘전직’ ... ‘기술자’의 삶 준비”

육군 정보병과 장교 전역 후, 4차 산업 분야로 재취업 준비... (중략), 매치업 드론과정은 분야별 교수와 산업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학원 석박사 수준처럼 교육 퀄리티 높아... (중략), 드론 산업 관련 법령, 비행·정비·산업 응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 향상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2년 135교에 4,070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지역의 중소(견)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서도 2022년 15교에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2년에 128개의 성인전담학과(총 4,392명)를 설치하여 재직자 등 평생·직업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30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4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4개 분야(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의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등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속런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 예정)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23년 5개 컨소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입하여 859명이 수료하고, 440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023년 3월)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신설하여 인문사회·이공분야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총 1,871개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비수도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의 토양인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 전분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본격 적용하고, 환경분야 창업·벤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과 경제 분야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2023년 1월 글로벌 장기 리스크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130여 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20년)하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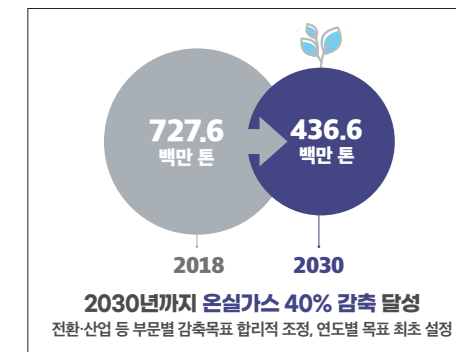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제2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함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핵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과 기금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7개 분야 계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계획·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우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 환경정보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조속한 저탄소화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했고, 총 78건의 기업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2022년 11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억원 규모이던 지원사업을 2021년 222억원, 2022년에는 979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기기 교체·연료 전환 등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



< 탄소중립정책지원센터 운영 >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수립·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체 광역지자체(17개소)에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기초지자체 20개소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본격적인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액트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역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탄소중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이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상향식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를 2022년 신설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지만 약 26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고, 700만 건 이상의 참여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폐배터리 수거 등 총 4개의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동을 인센티브 지급항목으로 추가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윤석열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ESG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를 환경에 대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2022년 12월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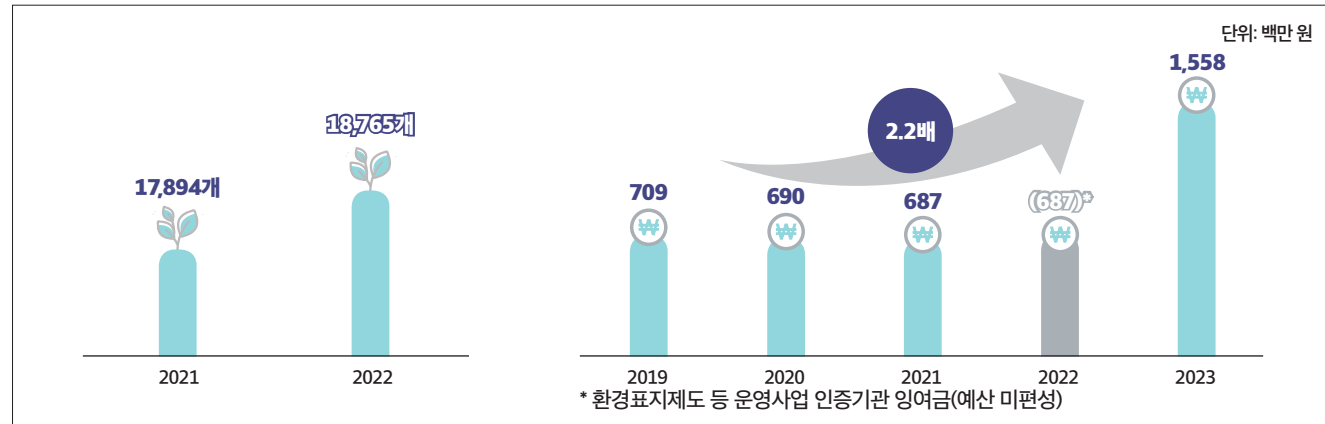
또한, 세제류, 샴푸·린스, 의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일반 인증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확대(4개 → 10개)하여 녹색소비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ESG 역량 강화 등 경제·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산업·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창업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분야도 신설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7회 개최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총 37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

< 환경표지 인증 제품수 및 예산확대 >



경하여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산업 창업과 융복합 메카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입주기업 대상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매출 6,352억원 달성, 투자유치 총 570억원 및 신규고용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주·수출 유망분야 사업 발굴, 친환경시장 개척,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의 수주·수출액은 연간 1.6조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의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4,06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의 운영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해 2022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고,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사업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 3곳에서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을 추가하여 더 많은 노후건축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환,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등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실행력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차별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로 물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지역 확대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기상·지진정보 제공으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서울 1시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교란 등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2022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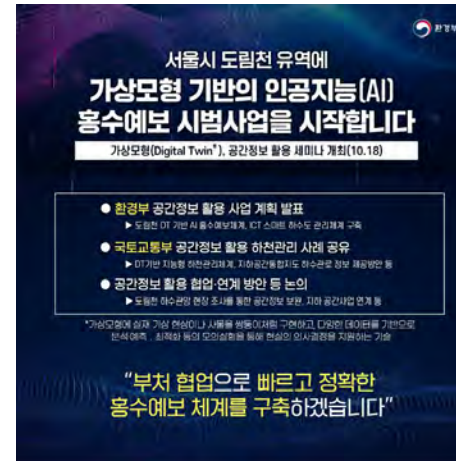
먼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피해예방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도입된 지하방수로, 강남역 빗물터널 등 1조원 규모의 선도사업이 담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시 시간당 100mm의 강수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을 2022년 10월 착수했으며, 향후 기존 인력 중심의 홍수예보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보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대응 테스트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댐 간 연계 등 공급관리 대책, 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절감 대책,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반영한 가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기준 광주·전남 용수수요량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 용수를 비축했고, 이 노력으로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섬진강 유역의 주요댐이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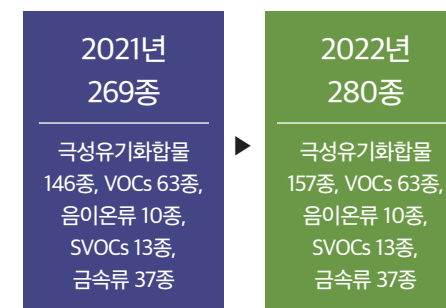
매년 증가추세인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계배출량으로부터 먹는물 안전관리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2021년 269종 → 2022년 280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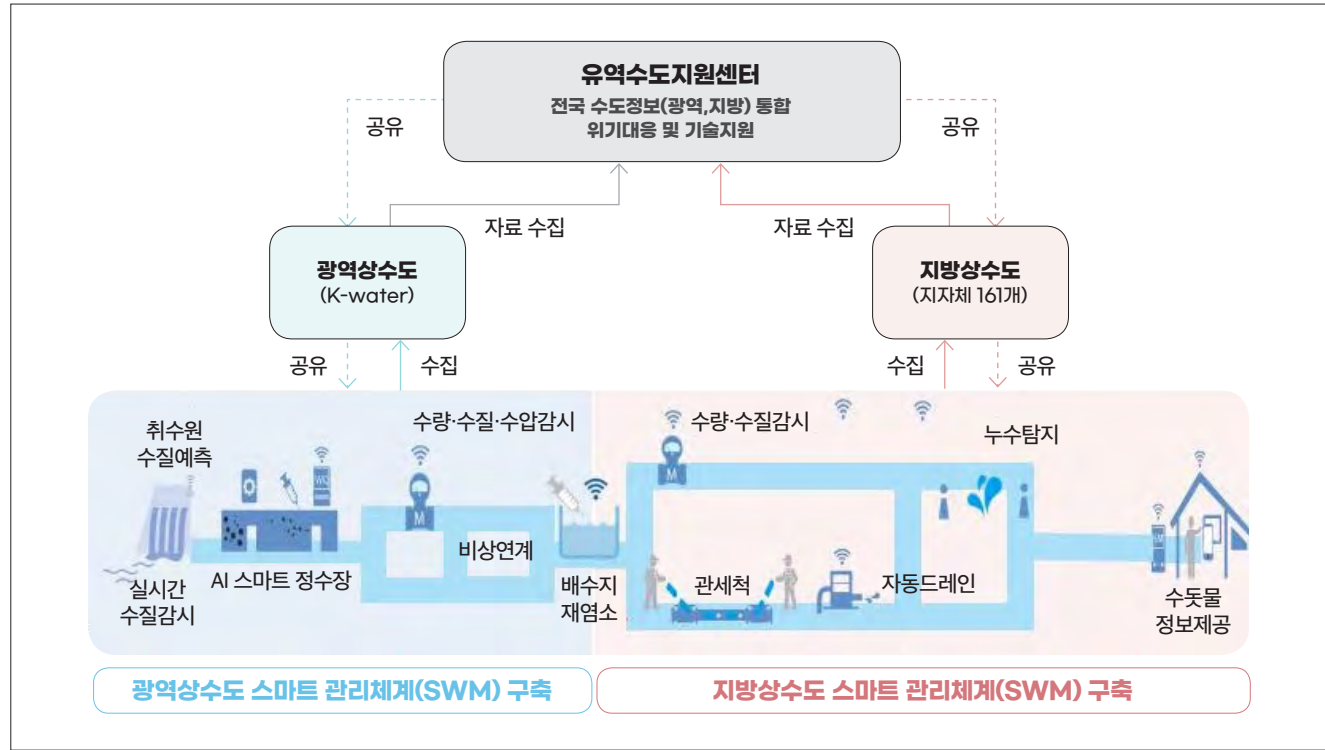
또한 낙동강 상·중류에만 국한된 모니터링 체계를 김해 매리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으로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 상시 정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측정센터는 한강·영산강·금강 4대강 수계별로

< DT기반 AI 홍수예보 시범사업 추진 >



<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 >





<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유충·적수사고로 국민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 및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수도물 공급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및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6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도 운영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구축(2022년 11월)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도정보를 연계하여 수도운영 상황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감시함으로써 수도사고의 조기인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수도사업 통합 협약서 >



물 공급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혜택 본격화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2016년 이후부터 동결했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기간을 확대(2021년 2개월 → 2022년 6개월)했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여 수도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상주) >



< 충주댐 수상태양광 >



< 초순수 실증플랜트(구미)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친수가 어우러지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2개 대상지에 대해 2023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여, 국민 여가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2년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총 24,350RT 규모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착수(9개소)했으며, 수열에너지 적용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여(법 개정 2022년 8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열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댐 내 수상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여 2022년 6개댐 226MW 사업을 추진했으며, 충주댐 준공(2022년 8월 31일)으로 연간 1,400가구가 사용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1,581톤 탄소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자립화를 위해 초순수 생산 설계·시공·운영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생산기술 검증을 위한 1,200㎡/일 세계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2022년 12월). 해외기술 의존도를 탈피하여 23조원 규모 물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2억톤이 낭비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 부산과 시흥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해 상수도의 의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UN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보호지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는 글로벌 목표를 2022년 12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157km², 여의도 면적 54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제14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고창군과 서천군, 서귀포시 3개소를 랍사르 습지도시로 새롭게 인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더욱 제고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2022년 12월 완료했습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울진 소형레이더 >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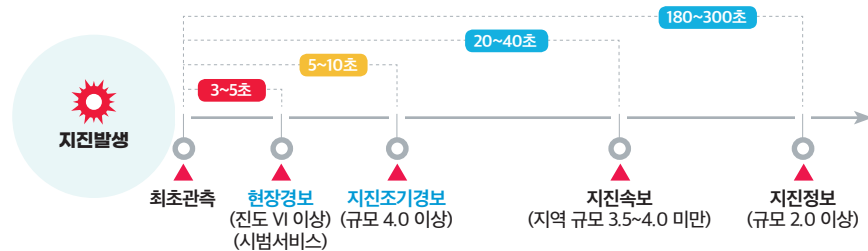
감악산레이더관측소를 신설·개소(2022년 6월)했으며, 대전·세종·청주 지역 실시설계 완료(2022년 5월), 광주·전주지역 공사착수(2022년 12월), 울산·부산 지역 제작사 인수검사(FAT)를 완료(2023년 3월)했습니다. 2025년까지 소형강우 레이더 관측망 구축(7개소)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 및 지형 차폐로 인한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홍수예측 및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 등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위험기상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24시간 위험기상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수예보정확도가 전년보다 1.5%p 높은 92.4%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방재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 호우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진현장정보체계’를 시범운영(2022년 8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충북괴산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가 지진보다 빨랐다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사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의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OECD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초미세먼지 감축의 세부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산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및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조기 제공,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2022년 12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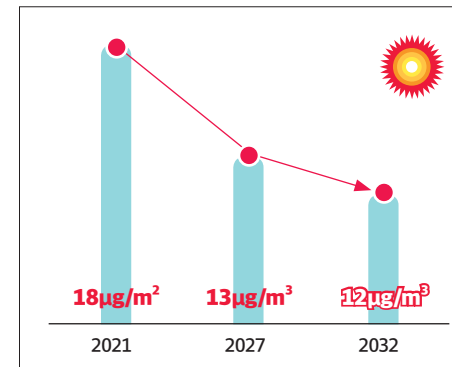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 $\mu\text{g}/\text{m}^3$ 에서 2027년 13 $\mu\text{g}/\text{m}^3$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 >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신호등

서,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는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의 선제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후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350여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했으며, 그간 활용해 온 드론과 이동측정차는 물론, 원격분광(分光)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하며, 민간점검단과 함께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발전·수송부문에서는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및 최대 44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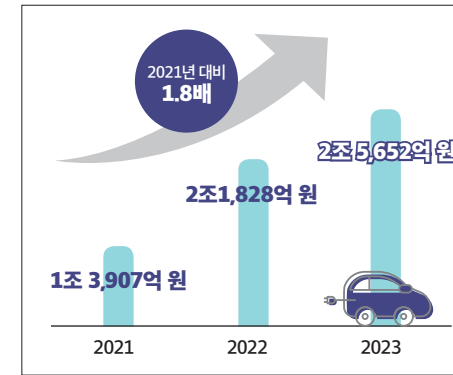
수송부문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감과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했고, 2023년에 5등급차 17만대, 4등급차 7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했고, 2023년 12월 시행 예정인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나머지 6대 특광역시(대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2년 12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개조 등의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마련했고, 2023년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무공해건설기계의 세부적인 보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경유차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7) 도입,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프리존 시범사업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누적 약 43.2만대(전기 40.2만대, 수소3.0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까지 보급된 25.8만대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충전기는 2022년 누적 20.5만대로 전기 충전기 1기당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소충전기는 229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더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이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관리 등 사업장 배출 저감 추진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7,708개소이며, 2023년까지 9천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2,263개소의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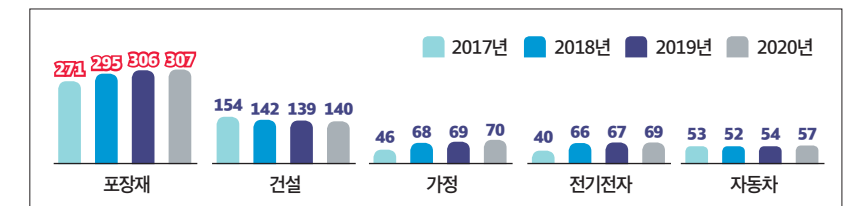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톤 →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 예상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톤 → (2021년) 488만톤(잠정)
- *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이에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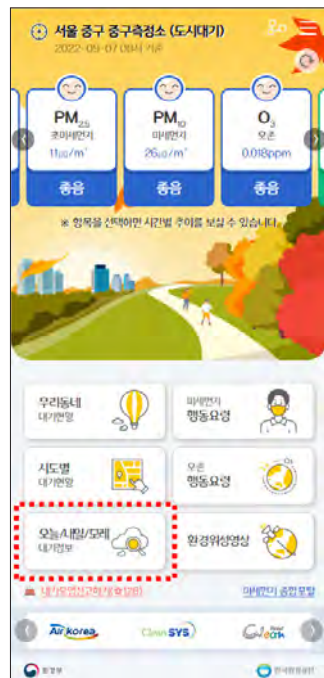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전국 18개 지자체의 1,139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로 시작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 2일전 예보(오늘-내일-모레) 제공 >



< 고농도(50µg/m³ 초과)예보 제공 > (수도권 대상, 2022.11월~)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다(多) 배출 4대 업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사업장 지원 확대,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 기반 구축 지원,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감시 단속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2022년 10월 예보 조기제공을 위한 예보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고농도 예보 2일 전 대국민 서비스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조기 제공 예보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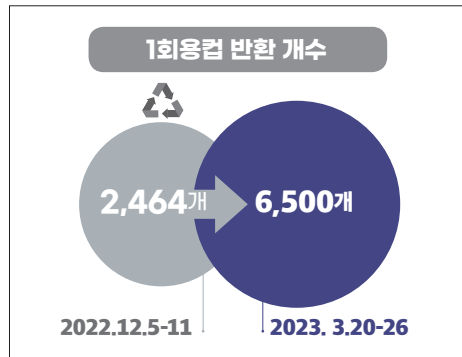
또한 지역별 대기질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 887개소에서 2022년 919개소로 확충했으며,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국 13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환경연구소 확충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인,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24µg/m³)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공기질 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중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대중교통차량 15대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의 컵 반환 습관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건당 200원)도 제공합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5~11일엔 하루 평균 1회용컵 2,464개가 반환됐지만, 2023년 3월 20~26일엔 하루 평균 6,500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대상품목 추가 및 준수사항 강화 등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2022년 9~10월, 17회)를 개최하고, 지하철·KTX·유튜브 등에 정책 홍보영상을 송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接客방식 변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을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20%가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간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이용목표율(2023년 3%, 2030년 30% 이상)을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페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산업 육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듦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하여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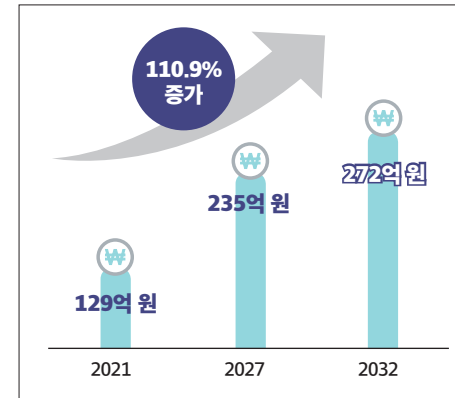
또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약 555톤을 수거했으며, 휴게소 및 거주공간 등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숙박업소 등 투명페트병 다량매출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폐지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폐지 공공비축을 추진하여 폐지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공공책임수거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공공선별시



< 공공선별장 확충 현대화 예산 >



설 내 선별시설 교체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의 회수·선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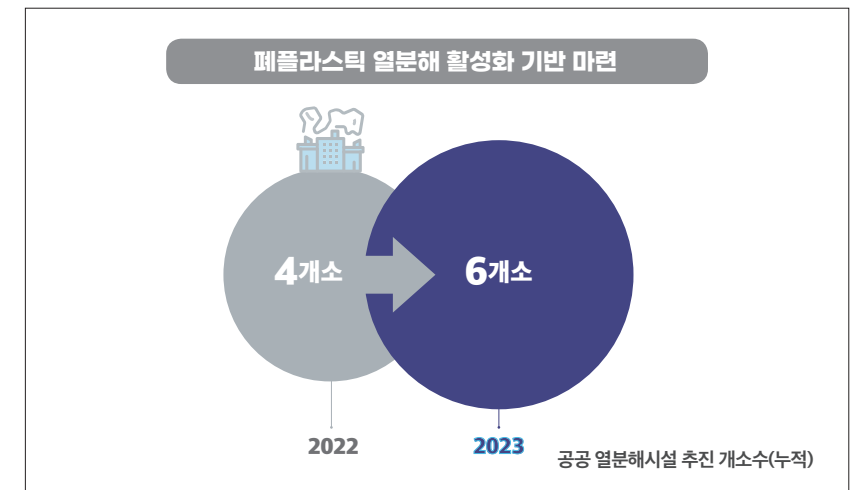
페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페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페플라스틱 열분해원료 확보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 확충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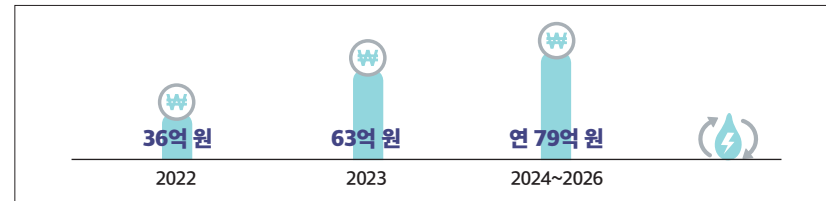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4개소(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3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통합 바이오가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2022년 6월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지방자치단체·유기성폐자원 관련 담당자 및 공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가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폐자원 재활용 방식에서 에너지화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호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일경험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신설했으며 학자금대출 확대·기숙사 신규 개관으로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청년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가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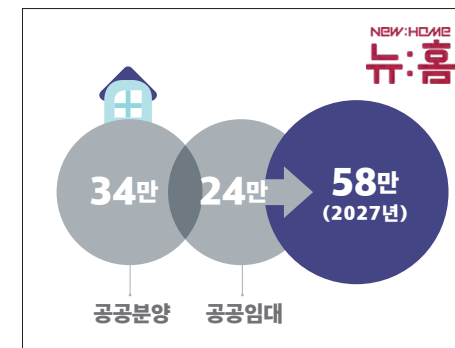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인 약 3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과 미혼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초저리·장기(최대 40년)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가 전체 접수자(총 15,353명)의 70.9%를 차지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6.5: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주택 총 2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여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와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을 80%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4억원 → 6억원)를 통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금융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지역·소득수준과 관계없이 LTV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과정에서 LTV 상한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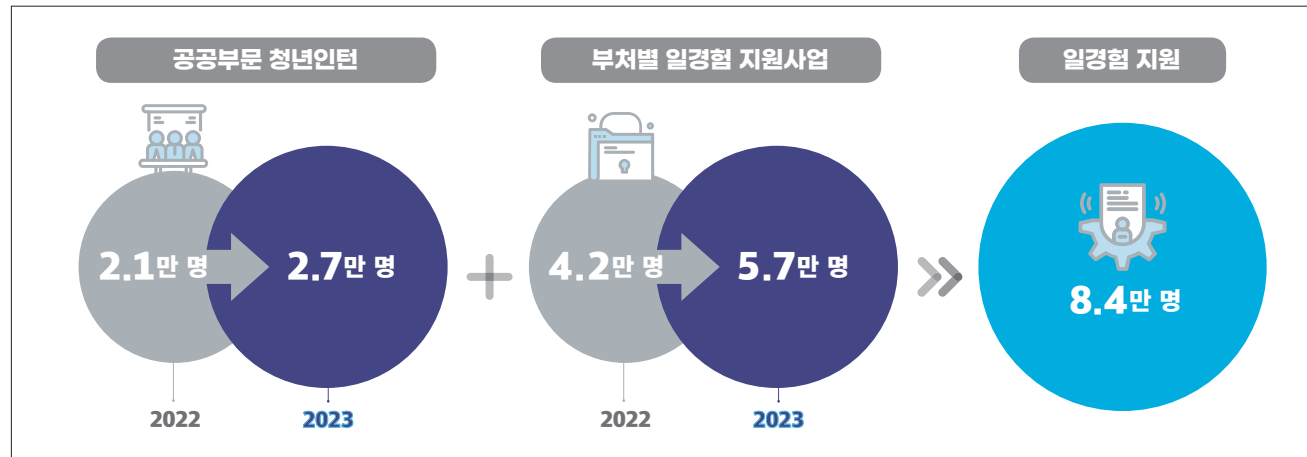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1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to Service Ratio) 산정시 20~30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20대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현재소득 기준 대비 최대 51.9%까지 확대되며, 30대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경향에 따라 높아진 청년들의 일 경험 수요에 맞추어 청년 일경험 기회를 직접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해외인턴 기회도 확대하여 2023년도에 공공부문 27,000명, 민간부문 57,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총 80,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2년 대비 21,000명 확대)

2023년 1월에는 그간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실업해소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기반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고학년에게는 훈련·일경험 기회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3만명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험과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개인별 진로설정과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훈련·일경험, 취업스킬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간



협업을 통해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민간협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멘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여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간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7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지원사업’도 시작하여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20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2023년에 신설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우수 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우대 선발하여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창업기획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사가 선발·육성·투자유치까지 책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2022년, 대전)하여 우수 청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는 계기(최고 경쟁률 약 16:1, 타지역 평균 대비 3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전국 청년 창업자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원) 신설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은 민간 창업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다소 부족했으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면 유명 창업기획자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A사)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 세대에서 빚투, 영끌 등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유행했으나,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감수성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하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등의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주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실태 및 청년 등 일반응시자에 대한 차별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민과 공무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4월)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임금 등)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윈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3년 1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22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운영(20개교, 1,891명 참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하여 군 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2년 11,178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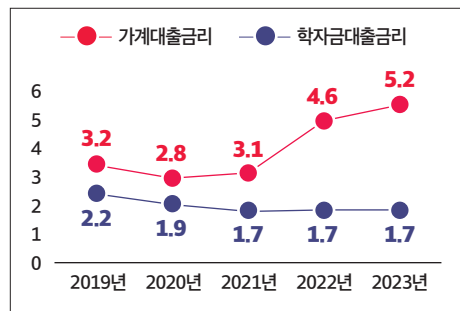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 대학생 102만 명에게 총 3조 7,22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36.4만 명에게 총 1조 6,346억원의 학자금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도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에 6개 국립대학, 2023년에는 5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도 2023년 3월에 신규 개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행복(연합)기숙사 착공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인원을 2022년도 49만명에서 2023년도 120만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추가로 전문자격시험제도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구제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연예 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중소기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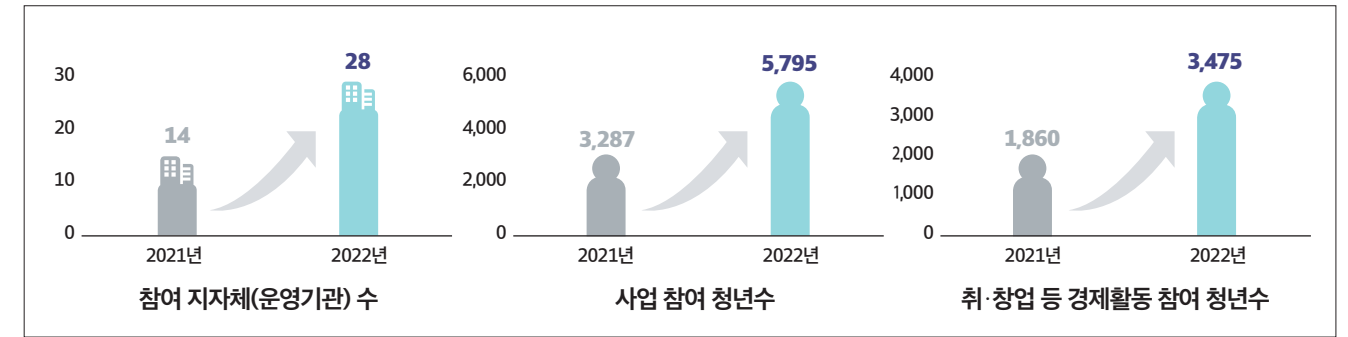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 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6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12월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여타 지원상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며, 이 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성과 >



취약청년 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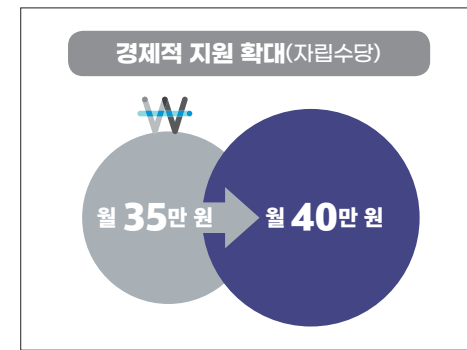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자립과 독립, 학업과 취업의 이행 등 청년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 어려운 취약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더욱 적극 확대·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기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단계별(보호 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종료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1월)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2022년 진행된 정부차원의 첫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심리·휴식 지원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서비스를 신설하여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느끼는 채용 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을 확대하여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를 정식 개통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통 1개월 만에 3천 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2023년 청년정책평가단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년 중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설치를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기본법이 개정(2023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온라인 청년정책 정보시스템과 중앙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 사업,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시간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정책 알림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쉽게 청년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정보 및 상담을 종합 제공하고 지역별 청년 자원을 연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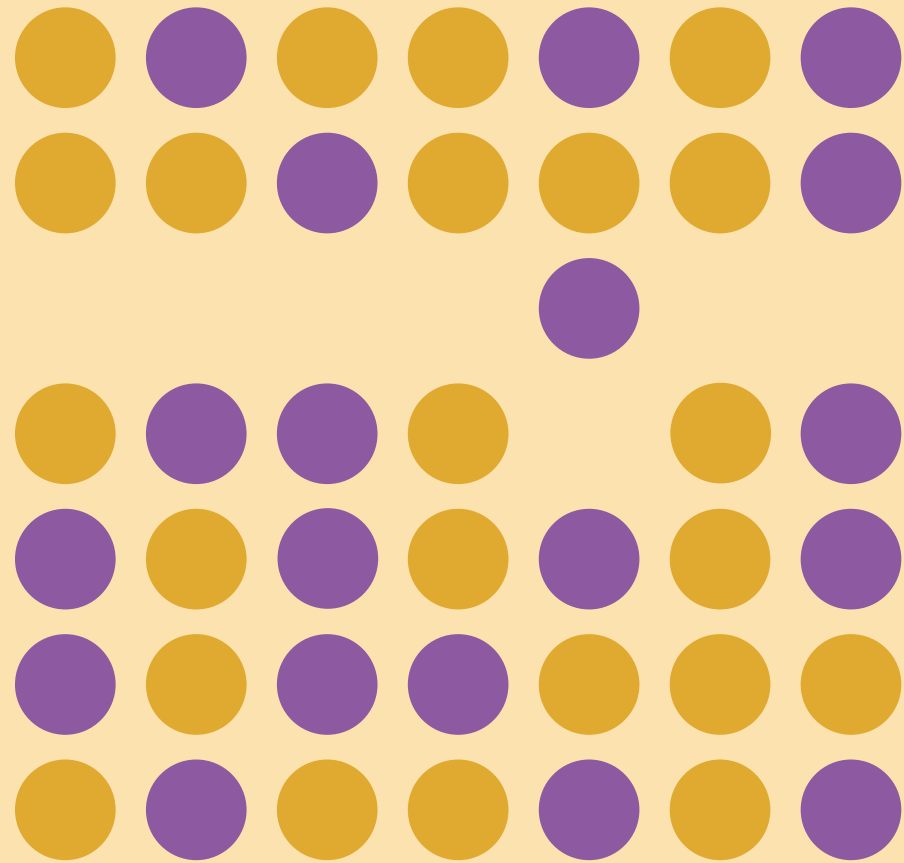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2022년 12월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등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3개 국가자격의 응시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해당 자격과 관련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응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취업 및 자격취득요건 중 인력요건의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학력기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자격·영업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5년간 공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마련한 비핵화 로드맵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후에도 대북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성안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 발표 후에도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 각급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우방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확보한 성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지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5개 권역 10개국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공조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 간 10회, 한러 간 4회 등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전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16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11월 3일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문을 도출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 후속조치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이 출범하고, 2022년 11월 17일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제외공관·국내 유관부처 등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한 총 5번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8일에는 국내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2023년 3월 21일에는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북 제재 레짐 강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은 지난 5년간 공석이였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석열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 직후부

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벨기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다수의 고위급 외교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던 우리 남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EU와 양자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국제기구·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정부는 남·북·미 3자 중심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약 7개월간 대면 협의 7회 포함 총 25회의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 관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중심의 협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고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있는 대북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는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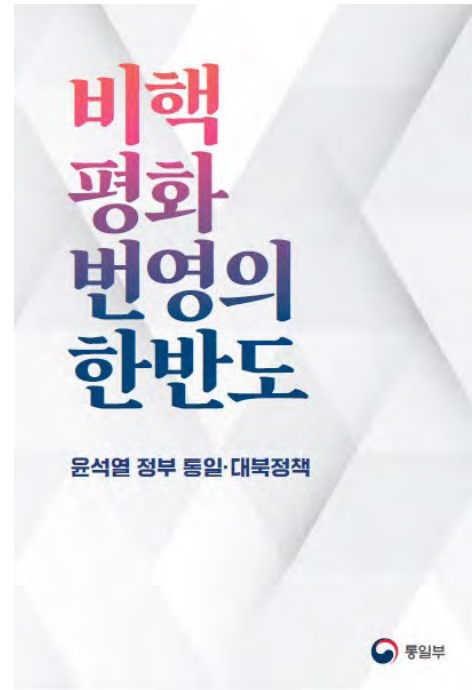
최근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은 한반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통일미래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마련과 제안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가장 실





효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개선 지원 등 초기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아 설명자료를 발간(2022년 11월 21일)하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선한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며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은 바로잡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10월 18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의 무단 철거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시 우리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호간 신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변화한 통일환경에 따라 통일미래 청사진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협업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2023년 2월 28일) 동 기구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 중입니다. 이 구상은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즉 자유·인권·소통·개방과 같은 '보편가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상(안)을 만들고, 국민·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폭넓게 청취하여 구상을 다듬어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인 미래세대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7개 권역에 걸쳐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개소한 인천통일+센터는 통일현장체험, 명사초청 특강 등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강원, 충청, 경기도에도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웬디 서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멜라니 줄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32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북한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그 비중이 지난 1년간 42%에서 62%로 증가했고, 북한자료센터를 국내 최대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교류협력 체계 및 질서 재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인의 자산에 대한 무단 침해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20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홍수철에 수해 방지시설을 직접 방문(2022년 6월 28일)하여 북측의 무단 댐 방류에 대해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법·일탈적인 교류협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효적인 신변안전·투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자산을 불법침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운영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간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회성 사업은 물론 반출 승인만, 계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춘 분야별 중장기 경제협력 계획인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을 개최(2022년 12월 16일)했습니다.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건전한 상호 개방 및 소통·교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언어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 '겨레말 큰사전' 편찬준비 등 주요 협력사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부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3차원 종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담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3년 3월 14일)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미래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일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메타버스('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등 온라인 플랫폼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유튜브·웹드라마 등 친숙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2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낙도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기자단', '창작통일동요' 등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올해도 가상(VR: Virtual Reality)·증강(AR: Augmented Reality)·혼합(MR: Mixed Reality) 현실 콘텐츠와 이산가족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회담 공개 제안,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정착기본금 인상, 긴급생계비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입국인원 감소, 국내 정착 탈북민의 고령화 진행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착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 3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보급 확대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인선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간단체를 초청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11월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이 제안이 유효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2023년 3월)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2명을 면담(2022년 10월)했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납북자·억류자 가족 10명과 위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귀환납북자(7명)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로방문하는 등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 일본 정부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례 소통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과 국제사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 육성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



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검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려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은 2022년 3만 2,082명의 관람객(2021년보다 149.8% 증가)이 방문했으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6만 5천여 명(2023년 3월 31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강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2023년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인상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상한액은 기존 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2023년 신설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6월 개관한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는 기초교육생 대상 맞춤형 교육 외에도 수료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화 직업훈련(8개 과정, 총 56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강화사업, 채용 연계 단기연수,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



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출범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더욱 밀착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조직을 ‘안전지원과’로 확대·개편했습니다.

2022년 6월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를 제정한 데 이어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가정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탈북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편,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래 리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역내외 정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역내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러 등 동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의 관점에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전략적인 협의체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 뜻이 뜻을 모았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미국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가 모두 방한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간 외교장관 및 차관급에서 거의 매달마다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이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확장억제 관련 공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만에 국민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례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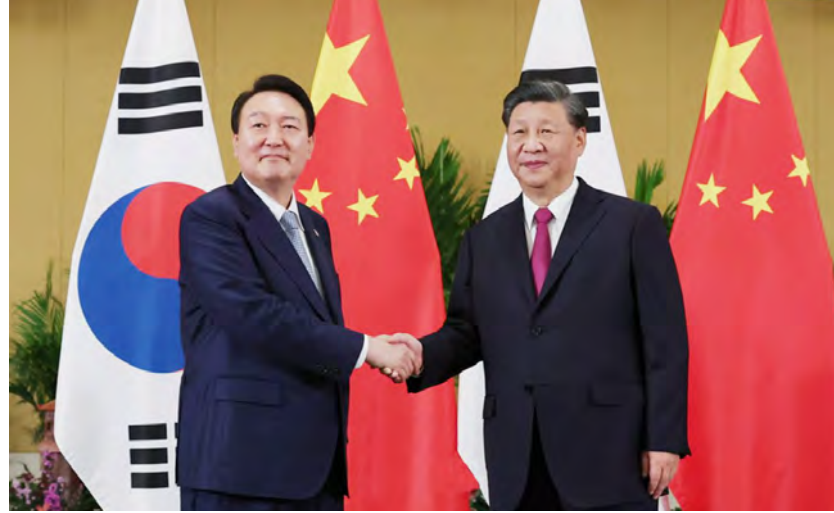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7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국민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 한중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9월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중 국회의장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대면 및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양·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인적·문화교류 복원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이 3년만에 운항 재개되었고,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3년 3월 간 중국 방송 및 주요 OTT 플랫폼에서 한국 영화 1편, 드라마 18편이 방영되었고, 우리 게임에 대한 중국 내 판호가 9건 발급되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년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양 국민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양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안보(2+2)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주도적 해법이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입니다. 또한,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 16일-17일)을 통해 서둘러외교를 재개하고 정상간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측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측 WTO 제소 철회, GSOMIA 완전정상화 등 양국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對러 제재 및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對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양아시아 국가 대상으로도 활발한 고위급 전략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외교정책을 이행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 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대상이자 한반도 정책의 주요 지지 세력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양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취임 첫째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2022년 10월 25일-28일)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고, 2024년까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20회 이상의 양자·다자 정상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 간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다변화, 경제안보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했는데,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베트남과의 정상회담과 동남아 9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심화했습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들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5년 만에 대면으로 부산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협력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마셜제도, 통가 등 태평양도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와 정상 및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자 교류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에 참여한데 이어 11월에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에도 정식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소다자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 등에서 세일즈외교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니다.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유럽외교정책을 소개하는 공공외교를 실시하고, 국외에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인 재외명예영사를 초청하여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는 등 대(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유럽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 대중동 경제외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사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수소, 농업, 제약,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 26건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하여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래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의 외교장관 및 정상급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었으며, 아프리카 5개국 이상에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순방을 실시하고 특사를 파견하는 등 양방향적 소통을 원활히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공표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소통하는 계기를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對)아프리카 외교정책 설명,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 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0월 9일~17일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리튬 등 주요 자원과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위한 경제안보협력에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7월 5일~6일 부산에서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하여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對) 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주요 고위급과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하여 다가올 제2의 중동 봄에 대비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대중남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경제안보 외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장기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태세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으며,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기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등 한중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2022년 6월)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3월, 12년 만에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복원과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비롯하여 경제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희소금속·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 합의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한-EU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주요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진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활동 강화 사업은 미수금 문제 등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당면하는 각

중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가 불투명하거나 수입규제 등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법적 문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 실행 공관 101개,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실행 공관 39개

정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간(2023년 3월), 기업 해외진출에 나침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해외에 가지 않고도 공관장과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20여 명의 재외공관장 및 270여 명의 기업인 참여, 총 380여 건의 상담 진행

다자경제협력 강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상시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 노력 등 국제 연대·협력 강화 역할을 부각하고,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선도 의지 표명과 각국의 동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 의제를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이견차 확대 상황에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각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도출을 견인하면서 G20차원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인 다보스 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공급망을 공유하는 주요 15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처로 한국을 알리는 한편,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정관계·언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에서는 부산박람회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인 공급망 안정,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지지 등 무역투자 증진 논의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구상 및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APEC에 소개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여하여 팬데믹, 코로나 백신, 식량위기 등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타결시켜 다자무역의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통상체제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WTO 회원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영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면·비대면 협상을 지속하여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베트남 세관협정 서명,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 계기 서명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의정서는 양국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혁,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룬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2년 발효한 양자경제협정

- 항공협정 :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세이셸
- 과학기술협정 : 미국(연장각서), 튀르키예
- 이종과세방지협정 : 타지키스탄
- 사회보장협정 : 뉴질랜드
- 해운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협력협정 : 말라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8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전통·식품 등 명칭 상표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했으며,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에도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한류편승제품 단속 등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2022년 9월 16일 개최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체 회의에서 ‘지재권 침해 다양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체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099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천명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여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탈탄소,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지속적으로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및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및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등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2년 12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2022년 5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2022년 9월)를 계기로 2023-2025년간 1억불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복귀

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튀르키예 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 논의의 진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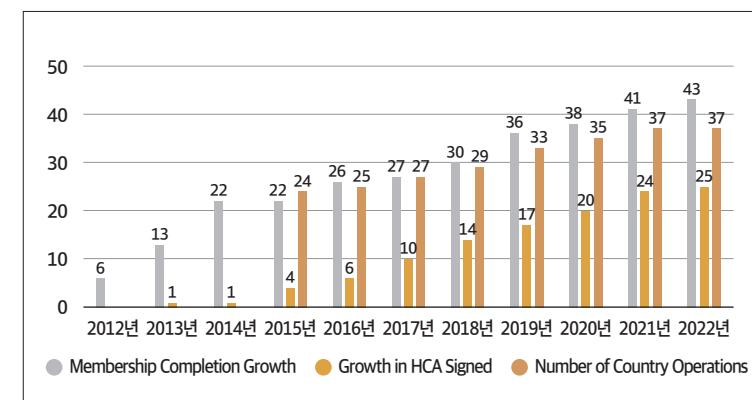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단은 산림, 해운 등 새로운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기후위기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EU, 캐나다 등 주요 기후선도국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확보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협력을 위해 22개 주요 협력대상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가봉, 2023년 1월에는 UAE와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서명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몽골과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그린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GGI의 사업 효과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확대했으며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그린 ODA' 확대의 일환으로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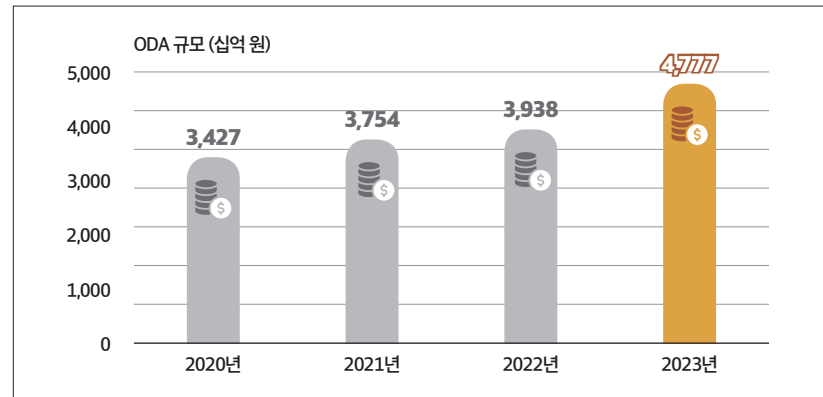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추이 >



< GGGI 참여 국가 >



<ODA 규모 확대 추이>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세계 10 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2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적응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를 마련했으며,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하여 8천만건 이상 전파하고 전 세계 100여

개국, 36만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총 83명의 제1기 반크(VANK) 청소년·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배출, 제주 국민외교센터 개소(2022년 12월), 2022년 29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총 20회의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청소년 외교 배움터 등을 통해 여러 외교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고했습니다.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2022 세계유산 국제 해석회의, 세계시민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유네스코 내 주요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위난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최근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의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달합니다. 세대교체와 신규 이민자의 증가로 동포 사회 구성도 다원화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민원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 신설과 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해외 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사고로부터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교민이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부득이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9월에는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방사능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10월에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베이징, 하이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귀국 허가 취득 및 공항 이동 교통편 지원,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0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세부공항 불시착 사고 관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장대책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민간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현지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 포함한 선원 19명이 탑승한 '비오션호'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범정부적 유기적 협력체제를 가동하여 수색 및 구조를 거듭한 끝에 우리 선원 모두 하루 만에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지역의 공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서 또는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는 2022년 8월에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송출, 공항 전광판 광고 등 대중매체·오프라인·테마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범죄·마약·해적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에 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정책 방향을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들과 직접 소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2년 3월)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기능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112개국 1,435개 한글학교 운영 등 한글·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53개국 1,300여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일



재외동포 모국연수

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피란을 지원하고 현지 잔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해 62건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했고, 그 중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 및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3개국 70여명의 한인 정치인을 초청하여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최했고,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계 한인 차세대 동포를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를 개최,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세계 한인 회장을 초청하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0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하여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총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세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민원 이용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여 우리 국민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증받아 해외에서 필요 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를 시행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배후 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확장하는 추세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목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북한의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위협 실태

- 국정원·경찰청 등은 2022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기관 60곳의 PC 210대를 해킹했다고 발표(2022년 3월)
- 국정원은 하루 118만건의 사이버공격을 탐지중으로 이 중 55.6%가 북한 소행이며,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해킹한 가상자산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2022년 12월)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인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

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8,000건의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유관부처 및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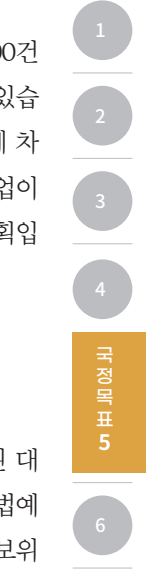
사이버 위협 역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역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7일 ‘사이버 공격방어대회’(Cyber Conflict Exercise)를 대구에서 개최하여 공공·일반·학생부문의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하여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2년 8월 18일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사이버위협과 대응방안 및 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작전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례화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협약가입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이 튼튼한 사이버안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 BIE 일정(경쟁PT, 유치계획서 제출)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통한 지지세를 확대하고 판세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유치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됩니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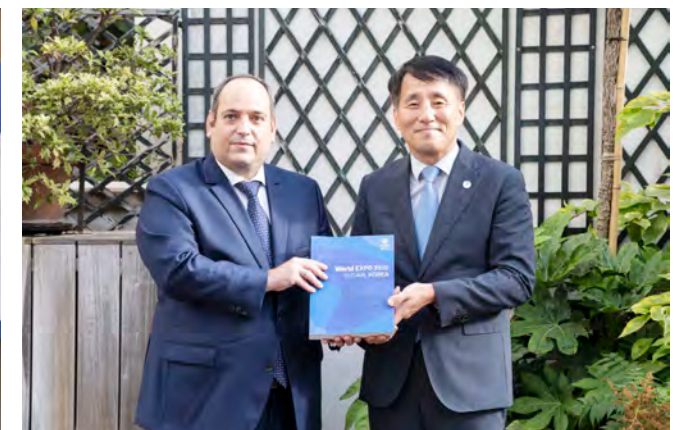
이에,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 주재로 3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유치계획서 제출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민 환영행사(부산역)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공식일정을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전방위적인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처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스팟 옥외광고(센강, 상철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로 BIE 실사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 관람객 : (현장) 6만2천명,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229개국, 4,907만건 재생콘서트 당일 SNS에 부산엑스포가 20만건 이상 언급되었으며, 지난해 언급량의 45배



BTS 홍보대사 위촉식



조수미 홍보대사 위촉식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치활동 체계화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 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 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외교장관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관 특사를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5대 핵심기구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유치교섭 점검회의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국방분야는 경직되고 폐쇄된 업무체계와 조직 등으로 민간의 신기술을 적기에 기술 도입·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안보·인공지능(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운용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22년 7월 육·해·공군, 해병대 1개 부대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UAM)박람회(2022년 7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2년 8월) 등 부·처 공동주최 무인체계 전시회와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2년 10월)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소개하고 국방무인체계(드론, 로봇) 활용의 범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기술발전과 협력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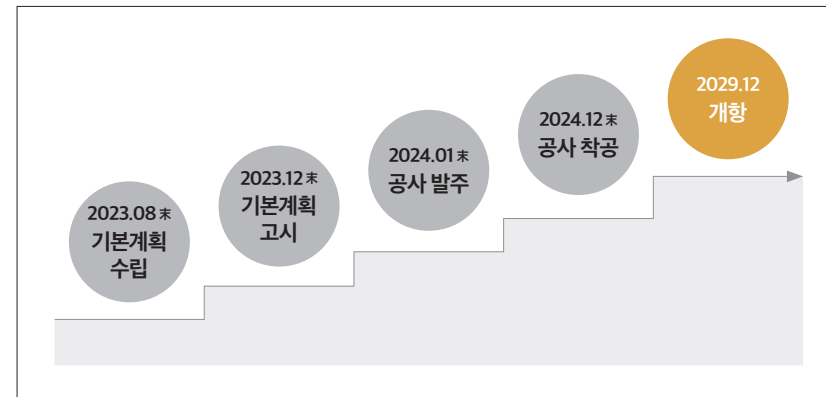
국방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현역 장병(2022년 5월) 및 대국민(2022년 9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하여 서비스(안) 10건을 도출하고, 구현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22년 8월-)를 실시하여 지반조사, 측량, 현지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일정>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 국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3년 11월 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BIE 대표 상주국가(영국, 벨기에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구현이 가능한 시범서비스 4건을 먼저 구현하고, 2024년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변화된 우주안보환경과 국가우주개발 추진방향 등에 발맞춰 ‘국방우주 전략서’를 새롭게 수립하여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나아가 사이버전 공격기술로 응용됨에 따라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통합화·자동화·지능화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특히,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여 작전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Electromagnetic Spectrum)을 국방안보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본부 조직 재편을 통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주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전략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전략서(2023년 2월)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2022년 12월)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2022년 9월)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군과 외부기관이 참여한 전력증강 TF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한 Fast Track 제도(신속시범사업, 신속획득사업)를 마련했으며, 기존 획득절차 또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세부 과제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주관 워킹그룹에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하여 설계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력 소모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하여 현용전력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역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하여 군구조를 검증·발전시켜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모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성이 있게 추진하여,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전에 부합된 실전적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기동 쌍방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계속해서 심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전담기구(한국형 국방혁신단)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분야와 이를 구체화한 16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 중점, 세부 수행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시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반영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여, 기존의 ‘핵·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하고, Kill Chain(공격), KAMD(방어), KMPR(응징보복)로 구성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정책·전략·작전·전력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해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3축체계 재원을 최우선 배분 및 집중투자하여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전체 방위력개선비 총 107조 4,000억원 중 39조 5,000억원(36.9%)을 3축체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역시 최우선 편성하여 방위력개선비 총 16조 9,169억원 중 35.7% 수준인 5조 3,000억원을 우선 반영, 이는 2022년 4조 8,000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 편



한국형 3축체계 개념

성한 것으로 전체 무기체계 중 3축체계 소요는 1순위로 반영,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배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우선 확충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II) 등 10개 신규 전력소요를 추가로 결정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조기경보위성체계 등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확보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 중인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은 물론, 미래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의 전력체계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1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4년 창설 이후에도 전략사령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형 3축체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

	① 조기경보위성체계 -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공격 및 요격체계에 제공, 낙탄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지원
	②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II) -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비 요격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을 향상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M-SAM Block-III) -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동시교전능력을 향상
	④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유도탄
	⑤ 함대공유도탄-II (對탄도탄용) - 대함탄도탄(ASBM)을 방어하고, 임해지역에 대한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도탄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II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대비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II, 우리 군의 주력 화력자산인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궤도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양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에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시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합동지휘통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 네트워크의 운용발전 방향’과 미래 정보유통 수요를 반영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등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정보감시정찰 역량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약 7조 8,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각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위성 및 무인기 기반의 정찰자산 확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통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업과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로 획득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합 및 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하여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을 사용한 방독면-II 5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킷(KMARK-1)와 개인제독제킷(KD-1)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협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매년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민·관과 함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했고, 2022년 10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 매물사고 발생 시에도 전문인력·장비를 투입하여 광부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4월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헬기 및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절별·유형별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한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여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여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을 외교·정보·경제(DIE : Diplomat, Information, Economy) 영역까지 확대하여 2016년에 외교·국방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 출범했으나 2018년 이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美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고, 북한의 가능한 모든 예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기지 방문 (2022년 11월)



한미 연합해상훈련(2022년 9월)



B-1B 전략폭격기 전개(2023년 2월)

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함대를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미는 1월 31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보다 많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임'을 공언했고, 바로 이튿날인 2월 1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확장억제 공약의 행동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 및 B-1B 등이 전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EDSCG 연례개최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로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하반기부터 '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기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3 FS 연습에서는 최초로 11일간 단절 없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



'22 UFS 연습 대통령 현장지도(2022년 8월)



연합함모강습단훈련(2023년 3월)

쟁고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 했으며, 연습 기간 중에는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여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했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3 UFS 연습시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한미 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되었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차

관'을 2023년 6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하여 방산분야 공급망 협력, 획득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방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고위급 정책협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2022년 상그릴라 대화 계기에 3년만에 재개했으며, 2023년에는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3년만에 재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3국 정상들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화하고 조기구축 추진을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 계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2022년 9월 5년만에 대잠전훈련을 재개했으며, 2022년 10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의 정례화 및 중단되었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 등을 재개해 나가기로 3자간 합의하는 등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미일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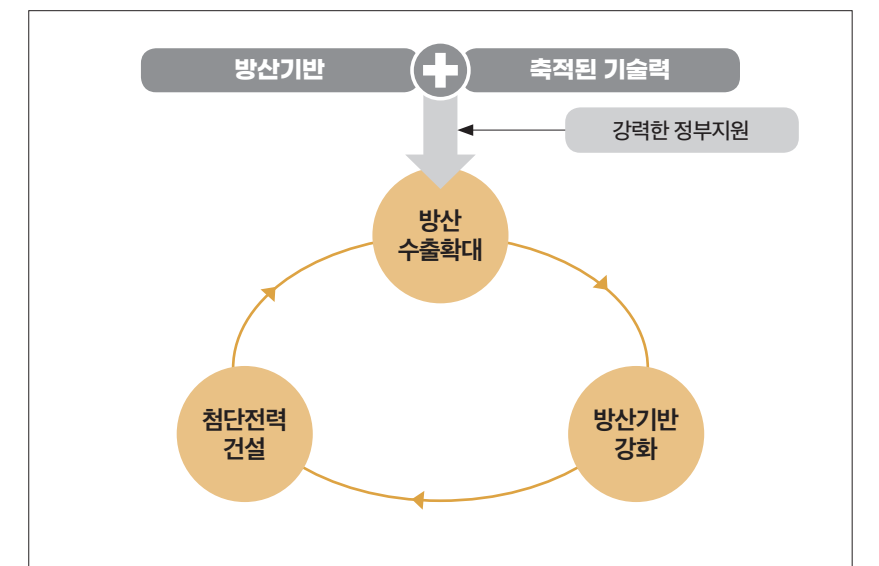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주요국 軍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당 실적을 달성했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하여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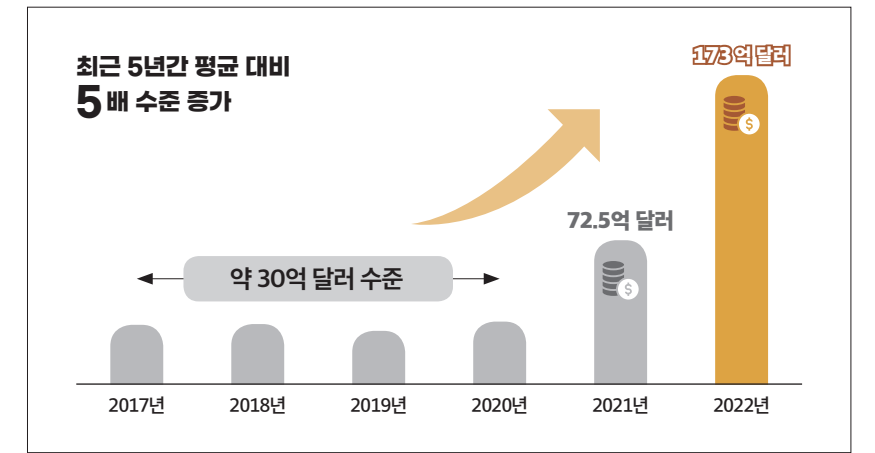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2022년 9월)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인 173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5월~7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사청·외교부·산업부) 및 출연기관(한국 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질 좋은 급식제공,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했고,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산을 바탕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시했습니다.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농·축·수산물의 의무급식을 현행대로 유지(수의계약 70%)하는 가운데, 장병들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조리인력*을 확충(3,188명)했으며,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 했습니다. 따라서 장병 선호품목을 확대(육류 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공급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급식으로 장병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병 급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식재료 가격상승을 고려한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전문조리인력 지속 확충, 현대화된 조리기구 보급 등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군 급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급 인상(2022년 187만원 → 2023년 192만원), 명절상여금 인상(2022년 50만원 → 2023년 55만원)

** 1인 1일 11,000원(2022년 1월부) → 13,000원(2022년 7월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하여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상용이불류 연도별 물량 및 예산 : 2022년 : 108,349세트 / 107억원, 2023년 : 216,698세트 / 218억원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선정하여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이불류에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하여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장병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은 여전히 장병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 생활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자군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지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을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국군외상센터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높이고 판독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병 휴가일수 산정방법 변경시에도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협업하여 병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입영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시기 선택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영대상자 중심의 입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장병 인권개선, 안전관리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확대하여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를 확충하여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소, 조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하고, 장병 대상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 민간전환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민간인력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북한의 군사 도발실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소통·공감형 교육기법을 적용한 영상 교재 ‘그날, 군대 이야기’ 등을 신규 제작하는 등 정신전력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유튜브에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군 유일의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연구인력 증원 및 독립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북 도발 상설전시실을 신설하여 연대별·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사례를 전시하고, 국방TV에 ‘북한 실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장병 및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조기에 개편하여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필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항공작전기지로 활용 계획이 없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조치원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 41만 5,000명에게 1,177억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대상 지역 및 보상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3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인상(2022년 141,000원 → 2023년 300,000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월 80,000원에서 월 160,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사 월급 2,000,000원 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병장 기준 월 1,0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33% → 71%)하여 20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당,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해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각각 50% 인상하고,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41%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되는 관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후 28년간 월 80,000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0,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원 단가를 2017년 1억 3,000만원에서 2022년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GP/GOP, 함정 등 현행작전 근무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진정제도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군인권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단급 부대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사건처리절차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강화된 토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전문강사와 군내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으며,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조사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병사) : (2020년)65.3%→(2021년)67.2%→(2022년)67.8%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간부) : (2020년)80.6%→(2021년)79.9%→(2022년)85.2%
(2022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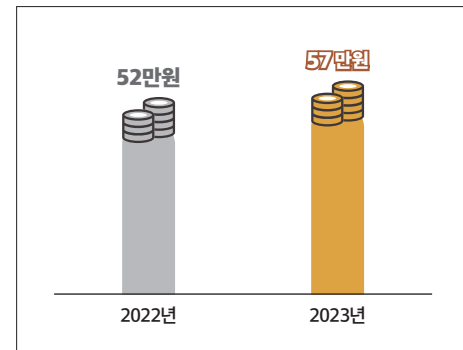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의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복지 카드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의료·요양·안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저비용·저품질의 보훈복지 서비스를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7급 보상금 >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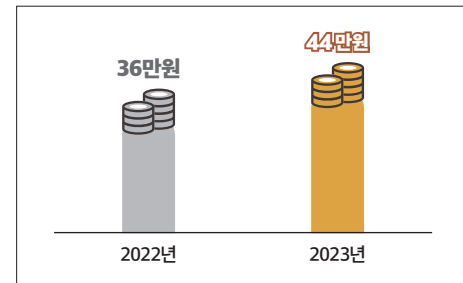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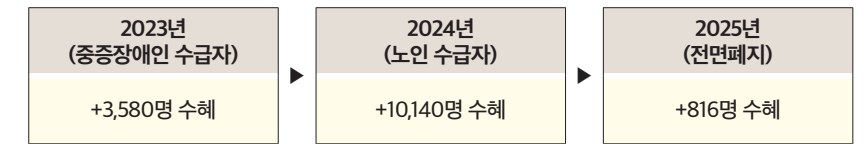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9%와 20.5%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원에서 2023년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행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청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했고, 2022년 9월에는 120병상을 갖춘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1년 518개소였던 위탁병원도 2022년 말 64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을 완료합니다. 보훈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7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을 통해 11만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운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창설했습니다. 아울러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내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2년 6월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해드리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통해 국민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급,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전달하고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



여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여 명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대응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중이며, 2025년까지 18만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하여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화보 영상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을 새긴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미 국방부장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김두만 장군 등 6·25참전영웅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3·1절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보훈광장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 공개, 3월과 4월에는 각각 2023 서울마라톤참가자 3만 2,000명이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부착 후 달리는 홍보,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 주요 전적지인 용인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전거 동맹길(로드)’ 개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전협정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토티위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전국 보훈 장관회의 등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



김두만 장군 복원 사진



숨은독립찾기 게임



카데미, 청년 참여 토크 콘서트, 학생 대상 정전 70주년 주요 전적지 탐방 등을 실시하여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한데 이어 올해 4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를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운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민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홍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 후 2025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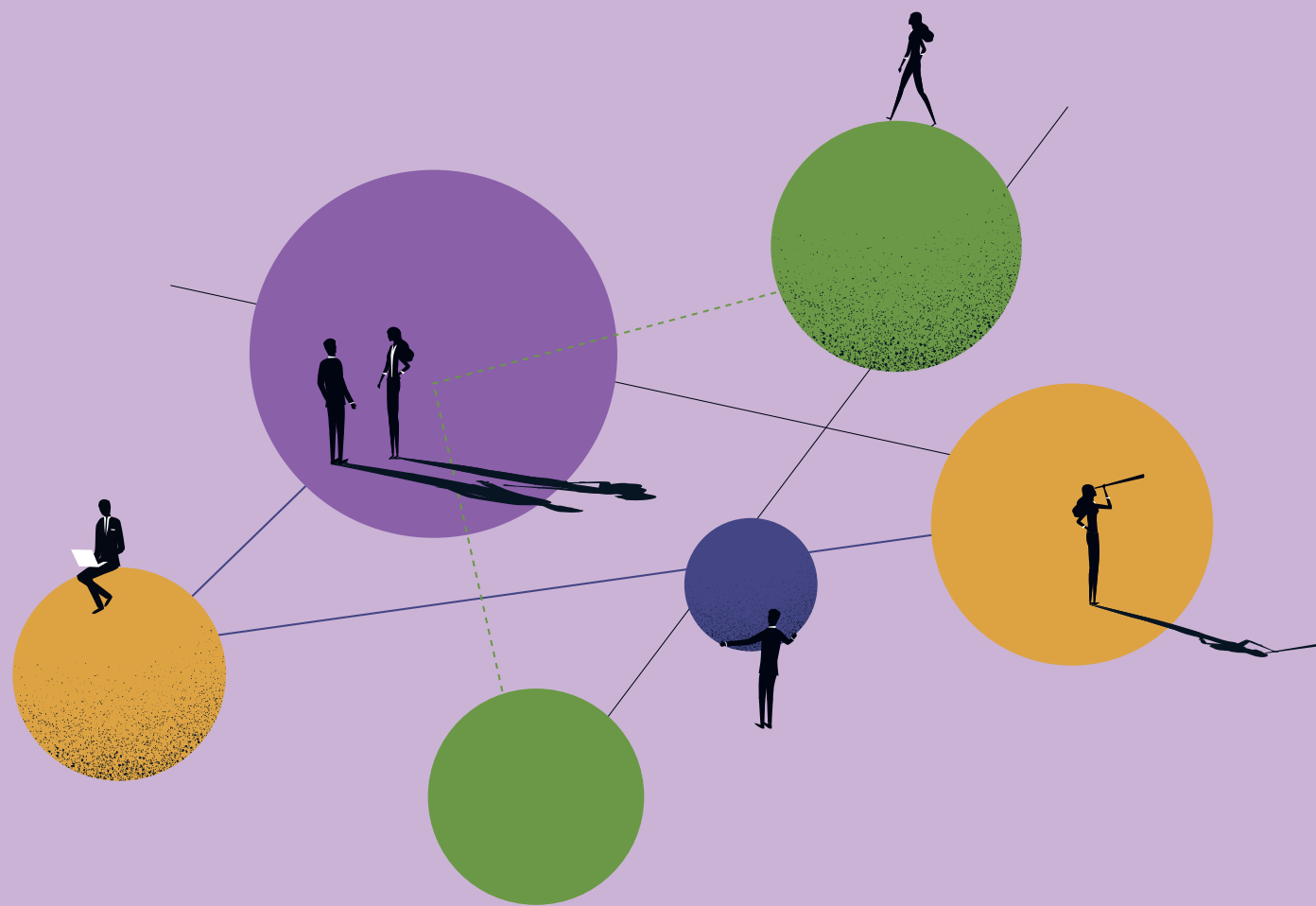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선열 국립묘지로 이장



LA 홍사단(단소)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도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년 2월 10일)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방에 이양된 사무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양완료사무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16개)을 발굴하여 정비(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5월 2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2023년 2월 17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을 구축하고(2022년 7월), 2023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 구조로는 인구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변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우수사례,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1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60건) 발굴·시상,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간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 및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연계협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정부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온종일 돌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2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



무총리)’의 설치 근거를 담아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지원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민간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4월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무 및 보증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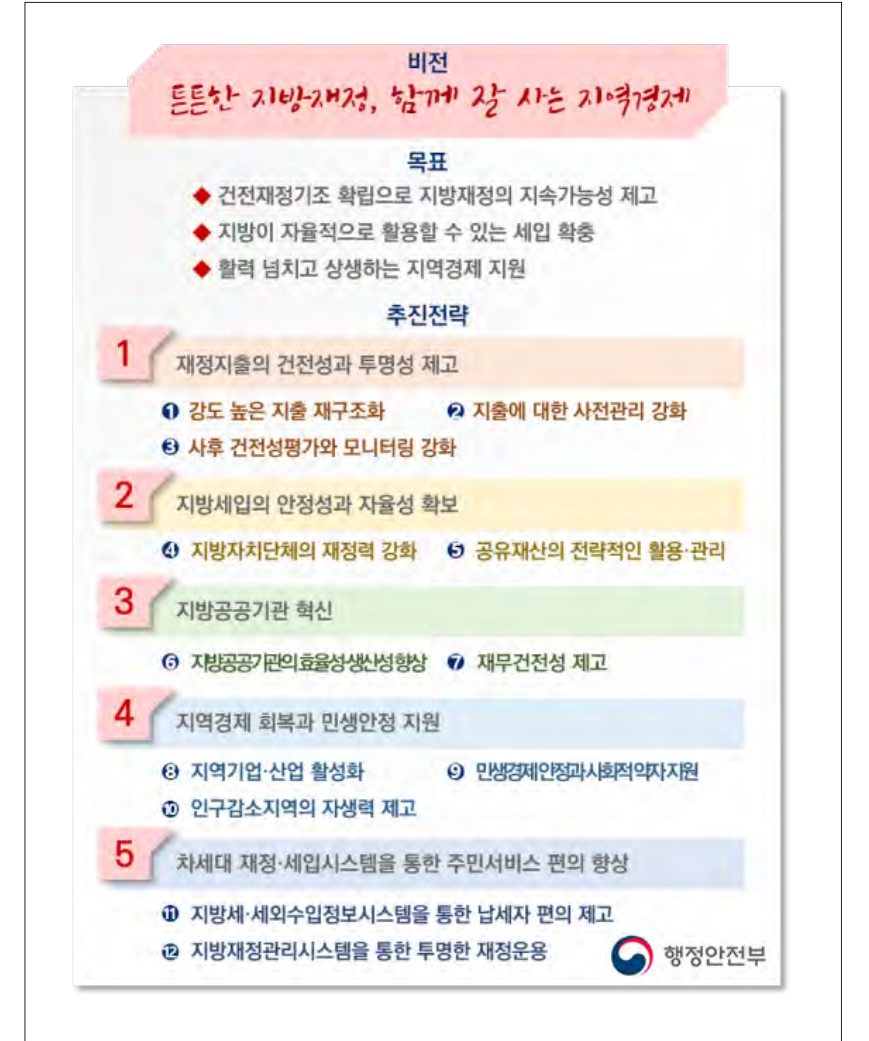
- **비수도권 비중(2015→2021)** : (인구) 50.6% → 49.6%, (GRDP) 49.9% → 47.2%, (취업자) 50.2% → 48.6%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원)** : (2018년) 23.5 → (2019년) 26.5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4
- **지방채무(조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지방보조금 관리 등 지방이 책임 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자율성 확보 등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시 필요한 인프라 개선 비용과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수요 가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양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50~200% → 75~300%)했습니다. 셋째, 기준인건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을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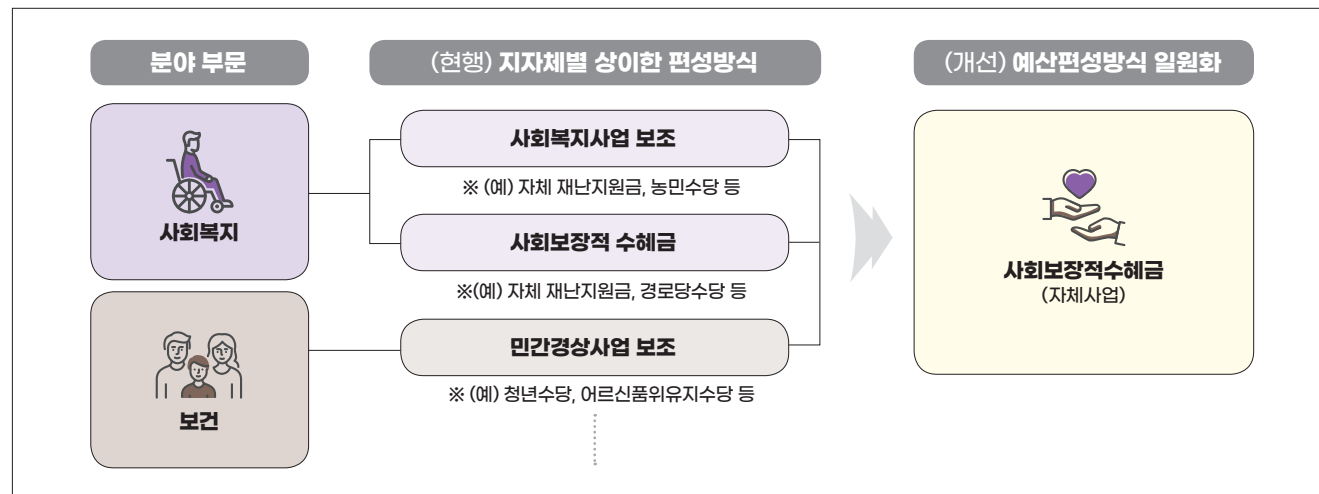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총 11조 7,433억 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도 추가로 상향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여,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누구나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8년 약 15조 7,000억원 → 2022년 약 20조 2,000억 원)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템e) 개통(2022년 8월)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약 36조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정부는 지역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특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하여, 지역 교육에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자유특구 내 규제개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97개의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보증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금액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국 시·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3월 1일부터 채권 매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민이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무매입을 면제하여 매년 약 116만 명, 약 46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현행 1%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 표면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여 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세계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간 정책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2022년 8월),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2022년 11월)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실적을 1달 이내로 공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사례(84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2022년 11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17곳)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체감사책임자회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중복 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 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2022년 4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2022년 8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 장애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5월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2022년 12월)하여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3차, 2022년 12월) 및 공모(4차, 2023년 1월),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2023년 2~3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육성법 및 국립대학회계법 등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시범지역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되었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채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주민투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참고조례안과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명령 하향 조정과 주민소환청구요건 차등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며,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지방의회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개정과 기존 유사 인력의 정비를 독려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과 제9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중에 의정비, 징계, 의원정책개발비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항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반기 중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역맞춤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거·생활지역 불일치로 광역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공공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 지원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을 추진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계획수립 적절성과 지자체 노력도 등 정성지표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력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시킬 계획입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2.6조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소멸 위기 등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이 인구 총생산의 50%, 소비규모의 약 75% 차지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공공성) 관점에서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 하위지역일수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상위지역일수록 지원비율을 하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민간투자 5,306억원과 8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민간투자 2,464억원과 신규고용 9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속적 발전(성장성)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하여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최대 10%p가산)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의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와 지원 시 가점부여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민간투자 9,762억원 유치로 전년(2021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같이 분권형 국가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전 국가적 열망과 지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공공성 관점과 지속발전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투자 지원으로 2022년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2021년) 대비 9천억원의 투자금액과 225개의 일자리가 상향된 성과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 기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식기반업종의 설비투자를 우대하고,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다변화와 지역 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요율 인하 성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5%인하 성과로 지역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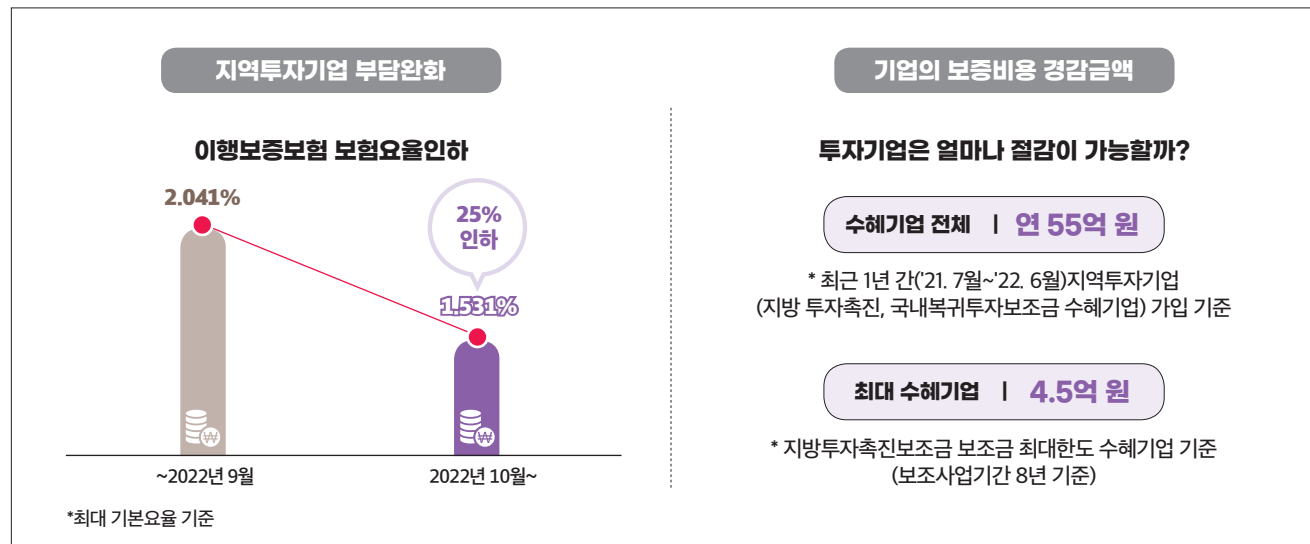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중 일부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율이 높다는 기업으로 사항을 제기(기본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041%로 높은 수준)했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행보증을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본사를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기업의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지방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현행) 2.041% → (개선) 1.531% (최대인하율 25%, 연 0.51%↓)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노력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투자·수출 애로해소 지원

2022년 6월부터 지역투자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된 투자 애로 해결방안을 소관부처 및 산업부 소관과와 협의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지역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률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2022년 11월 발의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 중에 있고,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권역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위기를 방지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행복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정부기관 건립 연구용역과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거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행정 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동캠퍼스는 2024년 조기개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착공·건립중이며, 9월에는 공동캠퍼스 잔여부지에 대해 2차 입주대학 모집을 실시하여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추가입주를 확정했습니다.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비전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 목표 및 전략
-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 2.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 광역도시권**
 -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 현안 공동대응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의 광역상생협력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하여 12월 고시했으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공동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1개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여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131개 기업에 총 20억원을 지원했고,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한 3개 기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부산·전남에 구축하고,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했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여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30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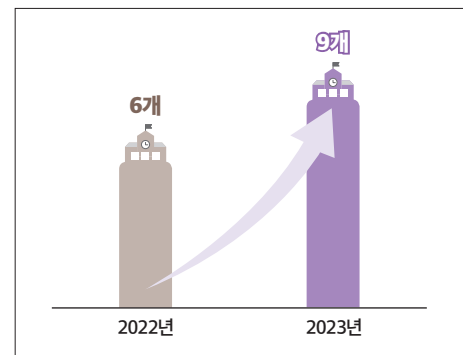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총 750개사의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하여 3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60%이상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는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2022년 9월)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4,358개사)과 투자자를 연계하여 5,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11개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137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 23.6%, 고용 20.4%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창업중심대학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대상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 및 전담 ‘컨페서(컨설턴트+프로페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기술경영지도, 기술개발 방법 도출 등 437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332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노력을 통해 1,962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36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 교육-인력양성-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산학융합 시스템을 정착하고, 공간적으로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혁신 벤처 모펀드 조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출자공고를 시행하여 동남권,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모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1,106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 모펀드 4,173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 개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법인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산발적인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을 개설하여

2023년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벤처투자자·투자유치 희망기업 등에 대상별로 맞춤 제공이 가능하며, 벤처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 매칭 서비스, 벤처투자 시장 현황 통계,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2개소(충청권, 호남권)를 운영했으며, 허브가 구축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 대비 21%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중에서 1개 광역권을 선정하여 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간 엔젤투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하여 2022년에는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39억원)를 지원했고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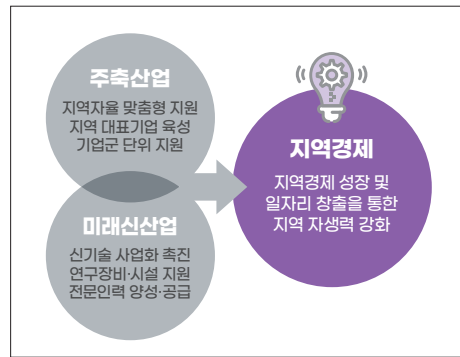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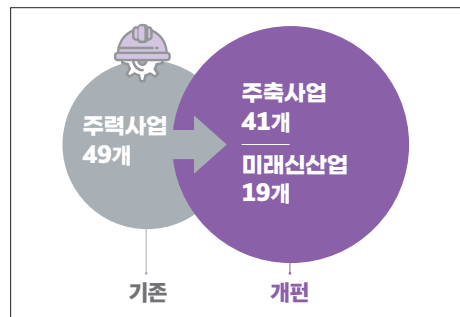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중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14개 산업은 지역단독형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협력형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축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미래신산업은 미래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확충(70→77개 센터, 2022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2023년 3월 기준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41,048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신규 심사인력의 확충,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창구 도입 등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개(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에 소재한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진단체계 강화 및 위기단계 결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긴급 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도의 창·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지역혁신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1975년 전체의 34%였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48.1%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 (2005년) 48.1% → (2015년) 49.4% → (2019년) 50.0% → (2021년) 50.4%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0년) △1.3%p → (2020년) 5.1%p
* 2021 국토조사(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7월)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2년 6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2023년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마련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제권역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

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했고, 2022년 4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논하던 2017년 9월 조선업 수주잔량은 1,669만 CGT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의 수주잔량은 3,750만CGT로 확대되는 등 5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2년 12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 단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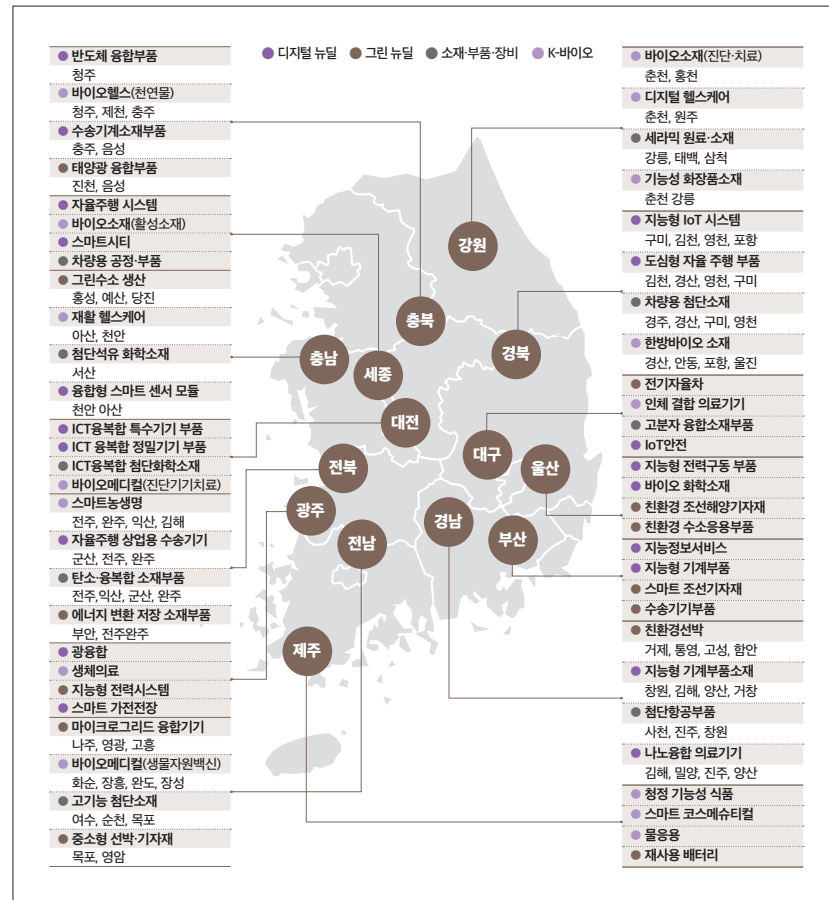
또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클러스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 >



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하여 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효율성 제고, 지역간·지역내 연계협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6월에 발의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대통령 주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 8일)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이외에 2023년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인력수요, 산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이하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축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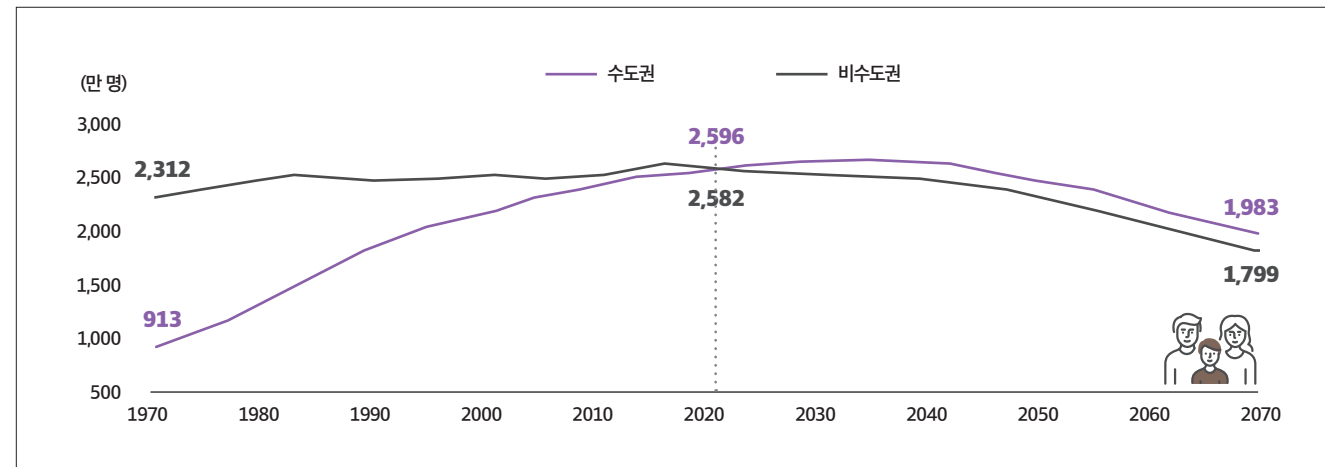
향후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하여 전년 대비 매출액 16%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하여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통계청, 2020년) >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6%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 역할의 축소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발굴·교육,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 육성,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17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배로 만든 '나주배 양갱'은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 통영의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맥주'는 영화 '한산'과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2022

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전국별미'내 조개구이 밀키트, 여주쌀 마카롱 등 13개 지역음식을 입점시켜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선도기업간 협업과제 16건을 발굴해 총 46개사를 지원하여 성장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재 능력이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를 지원했습니다. 6개 권역별 지역내 다양한 '유명점포(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12개 과제(총 37개사)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을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4개팀 선정하여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팀당 최대 5.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으로 골목이 산업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기반시설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유휴 또는 낙후된 지역·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을 전시하고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해 직주락(職·住·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강원 홍천, 제주, 경북 안동)를 구축하여, 2023년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진행, 지역기반의 창업가 양성에 힘을 예정입니다.

동네상권 소상공인·지역주민·민간혁신가 등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기획



하는 '동네상권발전소'를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상권 사업모형을 도출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활용하여 정작·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언트럴파크)'이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을 활성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브랜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조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연계하여 '울산 국제 임팩트 콘퍼런스(2022년 10월)', '온양온천 국제포럼(2022년 12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10개 지자체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간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과의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마을



을 만들기 사업에는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희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강원 태백-속초-영월, 충남 아산-태안, 전북 군산, 전남 강진, 경북 경주-의성-예천, 경남 하동-함양

향후에도 매년 청년마을 1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소상공인거점시설(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업지 15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국비 1,9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군 합천읍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 사업인 화장품·뷰티를 연계하여 뷰티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대표 골목상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대표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체계 및 법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2년 6월)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관할 시·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수립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배분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하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수 반영, 기금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안내, 평가 시 현장실사 확대, 성과 중심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낙후 지역에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2022년도 균형발전지표 갱신 결과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입지적정성 검토 등 제도적 측면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점부여 등 사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지표의 재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균형발전지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정책컨퍼런스 개최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정·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지역공약 이행 등의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2023년 4월)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근거 및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처·시도별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총괄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대응을 통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 지역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공약 이행상황 점검·지역 의견수렴·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도 2차례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제고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부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표어 아래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박람회는 따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관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지방시대관’으로 구성하여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